

그린뉴딜 정책을 위한 주요국 해양환경 ODA 사례 조사

A Case Study of Marine Environment ODA
in Major Countries in for Green New Deal Policies

허재영 · 이동림 · 김우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허재영, 이동림, 김우선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허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연구원 공동연구원 이동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우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연구위원
연구기간	2023. 1. 1. ~ 2023. 12. 31.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허재영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내부연구진	이동림 제3장 제2절, 제3절 김우선 제1장 제1절, 제2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민규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상경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목차

요약_i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02	DAC 회원국의 해양환경 ODA 및 그린뉴딜 현황_9	
	제1절 해양환경 ODA	9
	1. 해양환경 ODA의 개념	9
	2.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ODA 현황	12
	3. 한국의 해양환경 ODA 현황	15
	제2절 그린뉴딜 정책	19
	1. 정책적 배경	19
	2. 추진방향	21
	3.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22
03	일본, EU, 국제기구의 해양환경 ODA 정책 및 사례_25	
	제1절 일본	25
	1. 일본 ODA 추진체제	25
	2. 일본 해양환경 ODA 추진체제	27
	3. 일본의 해양환경 ODA 정책	29
	4. 일본의 해양환경 ODA 추진 현황	32
	5. 일본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례	35

제2절 EU	38
1. EU의 ODA 추진체제	38
2. EU의 해양환경 ODA 추진체제	40
3. EU의 해양환경 ODA 정책	41
4. EU의 해양환경 ODA의 추진 현황	49
5. EU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례	54
제3절 국제기구	57
1. 유엔환경계획(UNEP)	57
2.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기구(PEMSEA)	59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61

04 해양환경 ODA 주요 공여국 특징 비교 _65

제1절 중요도	65
제2절 목적	66
제3절 대상	67
제4절 주체	67

05 결론 및 정책제언 _69

제1절 결론	69
제2절 정책제언	71
1.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기 위한 해양환경 국내역량 강화	71
2. 개도국 해양환경 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72
3. 해양환경 분야 협력 파트너십 및 자원 다각화	73
4. 수원국 맞춤형 그린뉴딜 ODA 수립 필요	74
5. 해양환경 ODA 사업 지속 확대	75

표 목차

〈표 1-1〉 본 연구 추진체계	7
〈표 2-1〉 각 기관별 해양환경 ODA 개념 및 정의	10
〈표 2-2〉 OECD 해양 ODA 주요 세 가지 주요 지표	10
〈표 2-3〉 국내 해양환경 ODA 지원현황(2010~2020)	16
〈표 2-4〉 주요국가, 국제기구 그린 분야 정책	19
〈표 2-5〉 해양수산부 ODA 예산	22
〈표 2-6〉 유형별 분류	23
〈표 3-1〉 일본의 ODA 추진체계 내용	27
〈표 3-2〉 일본의 마린 이니셔티브 정책	30
〈표 3-3〉 일본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업 현황(2012~2020)	36
〈표 3-4〉 EU 해양전략기본지침((2008/56/EC) 체계	43
〈표 3-5〉 SDGs의 연계성(UN 발표)	44
〈표 3-6〉 EU 청색경제 전략(COM/2021/240 final) 체계	46
〈표 3-7〉 EU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업 현황(2012~2020)	54
〈표 5-1〉 일본과 EU의 해양환경 ODA 공여 특징 비교	70

그림 목차

〈그림 2-1〉 해양 ODA(2013-2018)	12
〈그림 2-2〉 공여국 해양 ODA 순위(2013-2018)	13
〈그림 2-3〉 해양 ODA(2013-2018)	14
〈그림 2-4〉 공여국 해양환경 ODA(2010-2020)	15
〈그림 2-5〉 해양수산 국가 R&D 현황	18
〈그림 2-6〉 주요국 그린분야 ODA 비중('15~'19년 평균)	20
〈그림 2-7〉 대한민국 ODA 예산 추이('17~'23)	21
〈그림 3-1〉 일본의 ODA 추진 체계 개요	26
〈그림 3-2〉 JBIC의 해양환경 분야 글로벌 투자 강화 지원	29
〈그림 3-3〉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 개요	30
〈그림 3-4〉 일본의 ODA 규모	33
〈그림 3-5〉 일본의 해양환경 ODA 규모	34
〈그림 3-6〉 일본의 해양환경 ODA 상위 10개 국가(2010-2020)	35
〈그림 3-7〉 EU의 ODA 추진 체계 개요	39
〈그림 3-8〉 EU의 해양환경 ODA 추진 체계 개요	40
〈그림 3-9〉 EU 해양환경 부문의 플라스틱 전략	47
〈그림 3-10〉 유럽개발협약(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체계도	50
〈그림 3-11〉 EU ODA 규모	51
〈그림 3-12〉 EU ODA 상위 10개 국가	51
〈그림 3-13〉 EU ODA 분야	52
〈그림 3-14〉 EU의 해양환경 ODA 규모	53
〈그림 3-15〉 EU의 해양환경 ODA 상위 10개 국가(2010-2020)	54
〈그림 3-16〉 UNEP 공여국 및 기금 현황	57
〈그림 3-17〉 PEMSEA 해양환경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60
〈그림 3-18〉 OECD 해양경제 관련 ODA 현황	63

요 약

그린뉴딜 정책을 위한 주요국 해양환경 ODA 사례 조사

허재영 · 이동림 · 김우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글로벌 해양환경 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원조에서도 친환경, 해양환경 분야의 ODA 비중이 더해가는 추세
-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25년까지 그린분야 ODA 비중(19.6%)을 OECD DAC 평균(28.1%)이상으로 대폭 확대 추진. 따라서, 국내외 해양환경 ODA 현황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추진방향 제시 필요

■ 국정과제 연계성¹⁾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관련되며 약속 19(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의 목표 99번(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의 ①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달성

1)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
- ②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 연구의 목적
 - 주요 선진국인 EU, 일본, 국제기구의 해양환경 원조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해양환경 ODA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벤치마킹 자료 형성

2. 연구의 방법

- 학술적 방법
- (정성적 분석)DAC의 해양환경 관련 정책문서 및 회의록과 국제기구 지원 전략 및 정책 문서 등을 통해 해양환경 원조의 현황 분석
- (정량적 분석)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세계은행의 세계개발(WDI) 등 통계 사이트 활용을 통한 해양환경 ODA 기금 및 프로젝트 조사
-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회의)해양환경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3. 연구 결과

- 연구 결과 요약
- OECD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환경 ODA 개념과 정의, 분류 체계를 제안함
- EU, 일본, 국제기구 등 해양환경 ODA 추진체제 및 모범사례 분석과 4개

주요 요인(중요도, 목적, 대상, 주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중요도) 해양환경 협력의 ‘중요도’ 측면에서 볼 때 EU와 일본 모두 국제협력에서 해양환경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EU의 해양환경 ODA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공여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목적) 일본은 해양환경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목적에 반해 EU는 인도주의적인 ODA 사업을 중시하는 특징을 나타냄
- (대상) 일본은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양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EU는 과거 식민지를 경험으로 아프리카, 태평양, 카리브해 등 ACP지역과 협력을 중시
- (주체) 일본 정부는 JBIC의 금융기능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협력에 전방위적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민간차원에서 재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를 신설하는 등 EU도 민간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남

〈요약 표-1〉일본과 EU의 해양환경 ODA 공여 특징 비교

구분	일본	EU	비교 기준
중요도	• 3억 1천만 달러	• 6억 6천만 달러	• 해양환경 ODA 규모
주요 목적	• 경제적 이익	• 인도주의적 지원	• 정책 및 전략 보고서 등
주요 대상	• 아시아(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 최빈개도국(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레바논 등)	• 협력 대상 국가
주요 주체	• 민간기업, 양다자, NGO	• 양다자, 민간기업, NGO	• 기구표 참고

- 한국도 최근 들어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양적으로 확대하려 하지만 여전히 그 비중은 미미하며 환경 주류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 미흡

- 정책화 방안

- 우리나라 해양환경 협력을 위해 ①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기 위한 해양환경 국내역량강화, ②개도국 해양환경 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③해양환경 분야 협력 파트너십 및 재원 다각화, ④수원국 맞춤형 그린뉴딜 ODA 수립, ⑤해양환경 ODA 사업 지속 확대 필요

4. 기대효과(예상 성과)

- 정책적 기대효과(또는 학술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ODA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 공여국의 해양환경 협력사업 조사, 분석을 통한 한국의 ODA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주요국의 해양환경 협력 사례 및 지원 체계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외교 강화의 증장기 계획 수립 기여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해양환경 문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원조에서도 친환경, 해양환경 분야의 ODA 비중이 더해가는 추세이다.²⁾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중립 선언 동참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상향 등 논의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EU·미·일 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본격 추진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ODA 등 대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한국정부도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목표로 삼고,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법을 제정하였다. 2021년 8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였다(장영우 외, 2023). 이는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이행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핵심 수단으

2) 주요국 그린분야 ODA 비중 연 평균 일본 49%, 독일 36%, EU 28%, 한국은 20%순으로 각각 비중을 차지함

로 삼고 있다. 2021년 7월 ‘그린뉴딜 2.0’을 발표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이주관 외, 2021).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도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그린뉴딜 ODA 전략’(21, 7월)’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국별 특성·국가발전전략 및 취약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은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그린분야 ODA 비중(19.6%)을 OECD DAC 평균(28.1%)이상으로 대폭 확대 추진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공여국은 자국 경제부양책의 일환인 그린뉴딜과 연계한 그린뉴딜 ODA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데 반하여 한국은 그린뉴딜 ODA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안예현, 2021). 그린뉴딜 ODA 비중의 OECD DAC 회원국은 평균 22.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4%로 불과하다(관계부처 합동, 2020).

해양환경 분야는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개도국의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ODA 발굴이 가능하다. 예컨대 공여국 중 EU와 일본은 기후변화대응 해양환경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신기후체제를 발표하고 해양환경, 환경오염 관리 등을 주제로 기후변화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ODA사업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위한 기후변화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규모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EU 또한 기후변화 분야의 주요 공여국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기후변화를 전방위로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해양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해수면 상승 대응 등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다수를 이루며(안예현, 2021),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국제의제 달성과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개발협력 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그린뉴딜 ODA의 전략적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해양환경 ODA 현황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추진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그린뉴딜 ODA 추진을 위해 국내외 양자 협력사례 분석을 통하여 해양환경 그린분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2절 연구 목적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이 된 이후 개도국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ODA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홍현표 외, 2010). 도서 국가를 비롯한 연안 지역의 개도국은 해양 동·식물로부터 식량자원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을 기반으로 한 수산업, 해양관광 산업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연안 개도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기반을 다지고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ODA 사업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해양수산부, 2017).

그간의 협력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ODA사업은 원조국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수원국 중심의 현장밀착형으로 추진하여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김정현, 2008). 또한 해양환경 관련 원조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양환경 문제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김수진 외, 2008).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즉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

본계획(2019~2023) 수립 및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정책개발, 연구, 교육 등 종합적, 과학적 대응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다양한 해양쓰레기 수거정책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5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한 경험이 있다(최지원, 2013).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된 한국의 개도국 해양환경원조는 사업의 기획, 발굴 단계에서부터 해양환경을 고려한 개발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다는, 단순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진행을 했다는 느낌이 강하다.³⁾ 또한 한국도 최근 들어 해양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확대하려 하지만 여전히 그 비중은 미미하며 관심도 부족하다.⁴⁾ 그뿐만 아니라 주요 공여국이 정책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양을 고려하는 해양 환경 주류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에는 그 진전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주요 해양환경 원조 공여국인 일본과 EU의 해양환경 중에 양자 원조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이 원조 정책을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형성하고자 한다. EU는 양적으로 가장 많은 해양환경원조를 공여하는 국가이므로, 한국이 원조의 양적확대를 원한다면 EU의 공여행태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은 기존의 협력방식에서 자국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 방식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해양환경 원조 주류화 노력을 한국이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공여행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23.2.9)에서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ODA의 양적확대 외에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분기점에 와 있다"며 ODA 효과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한기원 외(2021) 연구 보고서(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해양환경 분야는 주로 국가와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난 20여 년간 여러 해양환경기업들이 창업하고 활동해왔으나, 그 규모나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성장속도나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EU는 양적인 면에서 해양환경 원조를 주도하는 국가이고, 일본은 국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ODA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이므로, 두 국가의 해양 환경 ODA에 대한 정책 분석과 대조는 해양환경 ODA 정책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주요 공여국인 EU, 일본의 해양환경 양자 ODA를 분석하여 한국의 해양환경 ODA 정책을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벤치마킹 자료 형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일본과 EU이다. 일본의 해양환경 ODA를 살펴보는 주요 이유는 일본은 해양환경 협력을 국제협력의 중점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등 관련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해양환경 관련 기자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요가 아세안 개도국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해양환경 협력을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를 연구 범위에 넣은 주된 이유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공여국이 지원한 전체 해양환경 ODA에서 EU는 16%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규모가 크며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ODA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EU는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개도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PEMSEA, UNEP 등 다자협력기구의 해양환경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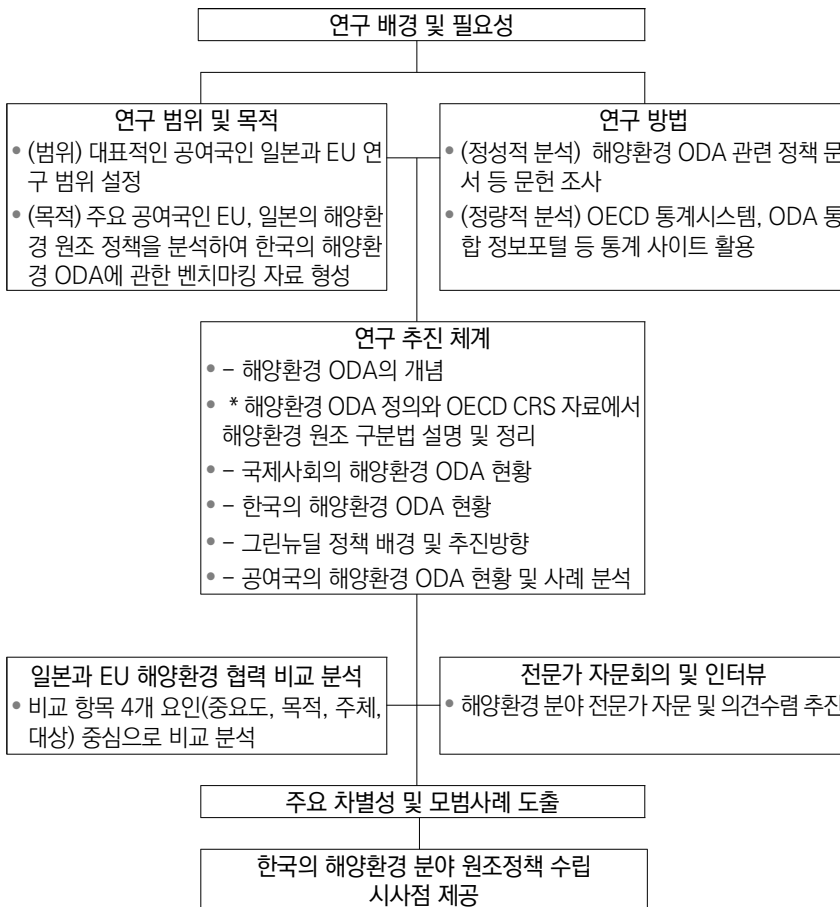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해양환경부문 원조를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질적 그리고 양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EU와 일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정성적 방법은 해양환경원조의 현황과 EU와 일본의 개도국 해양환경원조 정책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리고 OECD 통계시스템, 대한민국 ODA통합 정보포털, KOICA의 통계시스템 등 통계 사이트 활용을 통한 해양환경 ODA 기금 및 프로젝트 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인 제1장에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간략히 제시한다. 제2장은 DAC회원국의 해양환경 ODA 및 그린뉴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환경원조 공여국인 일본과 EU 그리고 국제기구의 해양환경원조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간략히 해양환경 ODA 정의와 OECD CRS 자료에서 해양환경 원조 구분법을 설명한다. 즉, CRS은 해양원조(Ocean Aid)에 대한 세 가지 환경정책 마커를 표기하고 있다. 환경이 주목적인 사업(2), 부차적 목적인 사업(1), 해당 사항이 없는 사업(0)인지에 따라 숫자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보존 활동 등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ODA에서 환경정책 마커가 2인 사업이 수행된 수원국은 해양환경 ODA를 받은 수원국으로 분류하고 수행된 사업을 연도별로 모아 당해 해양환경 ODA 수원규모 자료를 구축한다. 또한 이장의 소결에서 각국의 원조 정책

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제4장에서는 중요도 목적 대상 등 해양환경 ODA 주요 공여국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제3장, 제4장에서 밝혀낸 공여국의 정책과 ODA 현황 그리고 주요 모범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한국의 해양환경 분야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1-1〉 본 연구 추진체계



02

DAC 회원국의 해양환경 ODA 및 그린뉴딜 현황

제1절 해양환경 ODA

1. 해양환경 ODA의 개념⁵⁾⁶⁾

해양환경 ODA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해양환경 ODA 개념 정립과 분류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는 현재 도출되어 있지 않다(OECD 2021). 즉, 해양환경 분야 ODA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국제적으로 개념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외 해양환경 분야 ODA는 중앙·지방 정부에서 이미 각 부처마다 독자적으로 다각적 출구를 통해 수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의 체계가 없으며, 적절한 예산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해양환경 ODA 개념을 사용하여 개념적 확장을 시도한 논의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OECD DAC(1995)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해양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응

5) OECD ilibrary(검색일: 2023.7. 10.)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6) OECD Data Platform(검색일: 2023.7. 10.)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하는 ODA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FAO(2022)는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ODA를 해양환경 ODA로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지원(2013)은 해양환경 ODA란 연안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 개선을 말하며 해양오염 대응기술, 해양 생태계 관리와 보전기술, 해양 환경 탐사 기술, 해양 안전 기술 등의 사업을 강조했다(최지원, 2013).

〈표 2-1〉 각 기관별 해양환경 ODA 개념 및 정의

구분	기관	정의	비고
국외	OECD	•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1995년
	FAO	• 해양 쓰레기 및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ODA	2022년
	UN	• 해양분야 강화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ODA	2020년
국내	최지원	• 해양환경 및 생태파괴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 개선 공적개발원조	2013년
	장용창	• 해양 오염 예방 등 해양환경 관련 공적개발원조	2018년

자료 : 각 기관별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렇듯 해양환경 ODA란 연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해양환경 ODA로 이해된다. 한편 OECD에서는 해양 원조 구분 및 추적하는 지표 방법론을 제시했다. 즉 OECD에서 제시하는 해양 ODA를 추적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 〈2-2〉과 같이 ① 해양경제 ODA, ② 지속가능한 해양 ODA, ③육지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감소에 대한 ODA로 확인됐다.

〈표 2-2〉 OECD 해양 ODA 주요 세 가지 주요 지표

구분	주요내용	키워드 및 필터	SDGs 목표 ⁷⁾
해양경제 ODA	• 해양 기반 산업 및 해양 생태계를 지원하는 ODA(예: 연안 석유 및 가스 지원 프로젝트 등)	• 바다, 태양, 선박 등	• 14.1, 14.2, 14.4, 14.7

구분	주요내용	키워드 및 필터	SDGs 목표 ⁷⁾
지속 가능한 해양 ODA	• 해양 환경 보호 활동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ODA	• 해양 보호, 해양 오염, 해양 플라스틱 등	• 14.1, 14.2, 14.5
육지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감소를 위한 ODA	• 수처리 및 폐수처리 프로젝트와 같이 해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ODA	• 수처리, 수자원 보존 등	• 14.1

자료 : OECD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첫째, 해양 경제를 위한 ODA는 해양 ODA 또는 해양을 위한 ODA라고도 하며, 지원이 명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양 기반 산업 및 해양 생태계를 지원하는 ODA다. 예를 들어, 연안 석유 및 가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특별히 초점을 두지 않는 어업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SDGs 목표는 14.1, 14.2, 14.4, 14.7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ODA다. 지속 가능성 문제를 통합하는 해양 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해양 보존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해안 관광 및 지속 가능한 어업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맹그로브 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SDGs 목표는 14.1, 14.2, 14.5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육지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 감소를 위한 ODA다. 수처리 및 폐수처리 프로젝트와 같이 해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긍정적인

7) UN Global Compact에 따르면, 4.1 -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감소한다. 14.2 - 2020년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해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복원 조치를 취한다. 14.4 - 2020년까지 어류 포획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 및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어류자원이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5 -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지역을 보존한다. 14.7 -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발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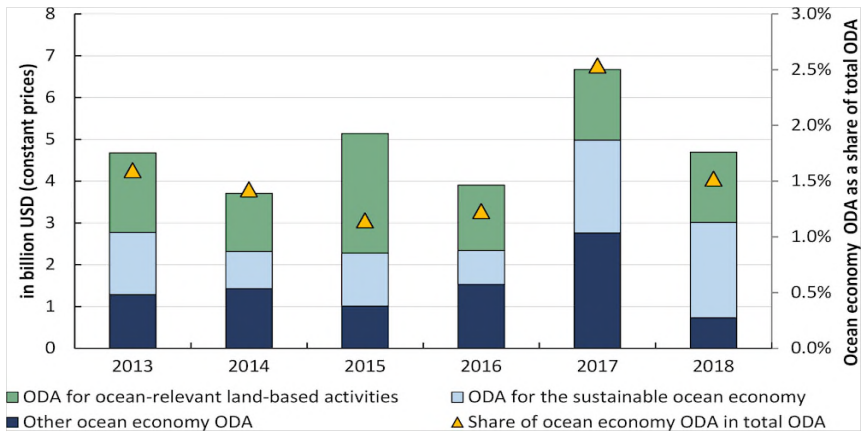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는 육상 기반 활동이 포함된다. 이 지표는 육지 기반 활동과 해양 활동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거나 대부분의 해양 오염이 육상 기반 활동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SDGs 목표는 14.1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보존 활동 등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ODA 지표(ODA for the sustainable ocean)에서 OECD DAC이 제안한 환경원조마커(Aid to Environment Marker)가 부여된 사업을 해양환경 ODA로 구분하고자 한다.

2.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ODA 현황⁸⁾

2013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연간 평균 30억 달러의 ODA가 해양 분야에 할당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ODA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해양 ODA(2013~2018)



자료: OECD ilibrary(검색일: 2023.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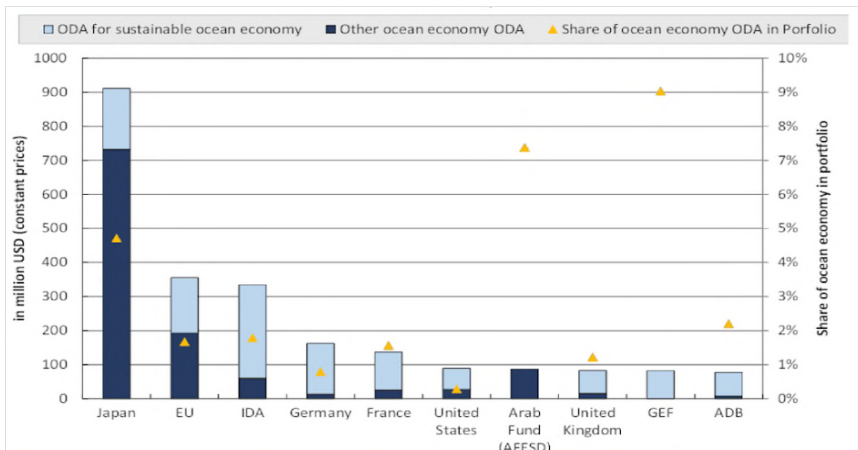
8) OECD ilibrary(검색일: 2023.7. 10.)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해양 ODA는 2017년에 급증하는 등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ODA는 1.6%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ODA의 극히 일부분이며 그중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에 대한 지원은 51%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ODA는 2018년 23억 달러, 2013-18년 연평균 15억 달러로 2013-18년 전 세계 ODA의 0.8%, 연안 및 도서국 전체 ODA의 1%에 해당한다. 2013-18년에 공여국들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폐수 처리를 위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해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육상 기반 활동을 위한 양허성 금융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공여국이 해양 ODA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 보다양자 간 지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ODA는 개별 공여자 ODA 규모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일본, 유럽연합(EU), 국제개발협회(IDA), 독일, 프랑스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해양 ODA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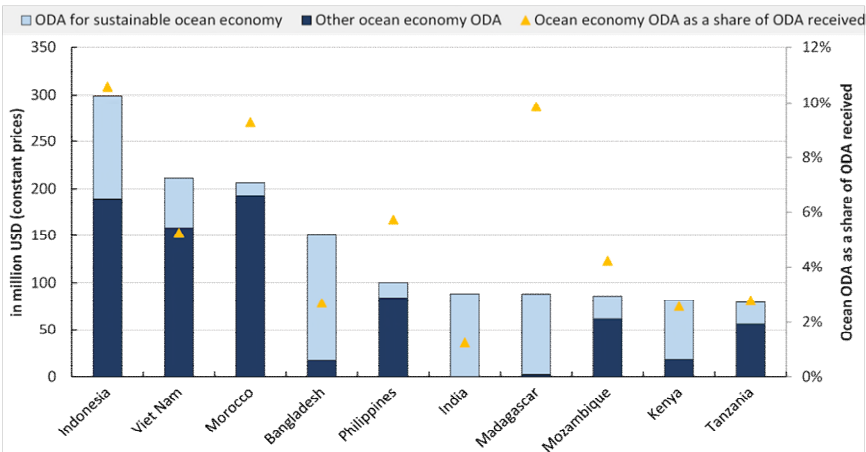
〈그림 2-2〉 공여국 해양 ODA 순위(2013-2018)



자료: OECD ilibrary(검색일: 2023.6.13.)

전체적으로 다자보다 양자 협력의 유상원조의 형태가 많았으며 이는 2013-18년 총 금액의 76% 또는 연평균 22억 달러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2018년간 상위 20개 수원국이 해양 ODA의 75%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개국에는 불과 4%만 지원하는 등 해양 ODA는 일부 수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해양 경제를 위한 ODA 지원은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수혜국이며 베트남과 모로코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2-3〉 해양 ODA(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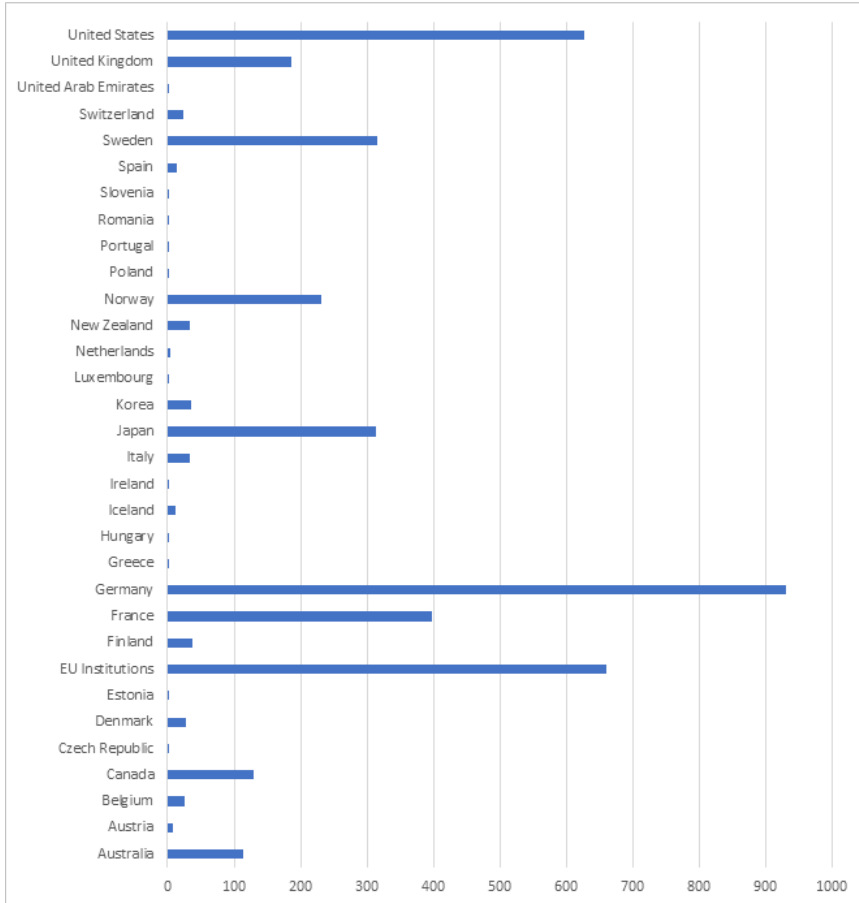


자료: OECD ilibrary(검색일: 2023.6.13.)

2013-18년 상위 20개 수혜국은 해양 ODA의 75%를 차지했으며 평균적으로 45개 수혜국을 합친 것보다 거의 10배 더 많은 할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해양 ODA의 4% 만이 하위 50개 국가에게 전달되었다. 2013-18년 기간 동안 국가 그룹 전체에서 중하위 소득 국가는 해양 경제 ODA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54%). 최빈국은 31%, 상위 중간 소득 국가는 15%를 받았다.

그림 〈2-4〉 DAC 회원국별로 해양환경 ODA 공여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4〉 공여국 해양환경 ODA(2010-2020)



자료 : OECD 각 연도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한국의 해양환경 ODA 현황

해양분야 ODA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은 1994년부터 연수생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는 ‘중국 황해유입물 오염측정 및 통제연구 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최지원, 2013). 해양 분야의 경우

코이카 5대 중점사업분야(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등)에 포함되지 않고 '환경 및 기타분야'에 분류, 이로 인해 중점분야에 비해 프로젝트형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최지원, 2013).

2010년 이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2-3>과 같이 순지출액 기준 약 9백만 4천불(120억 원) 규모이다.

〈표 2-3〉 국내 해양환경 ODA 지원현황(2010~2020)

년도	수원국	사업명	순지출액 (백만달러)
2019	베트남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18-'21/350만불)	0.183
2018	팔라우	태평양소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 및 대응 네트워크 구축	0.531
2019	베트남	베트남 운용해양학 연구능력 확충사업	0.341
2020	베트남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18-'22/350만불)	0.355
2020	베트남	베트남 운용해양학 연구능력 확충사업	0.469
202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사업	0.296
2019	콜롬비아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확충	0.432
2013	동티모르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64
2014	캄보디아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49
2014	베트남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49
2015	동티모르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07
202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사업	0.083
2018	베트남	베트남 해양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시범사업 ('18-'21/350만불)	1.032
2019	사모아	태평양소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 및 대응 네트워크 구축	0.428
201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사업	0.527
2010	스리랑카	통신해양기상위성 수신분석 시스템 개발사업	2.229
2013	필리핀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55
2013	캄보디아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54

년도	수원국	사업명	순지출액 (백만달러)
2014	동티모르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569
2015	캄보디아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03
2015	베트남	해양조사기술(아시아)	0.003
2020	팔라우	태평양소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 및 대응 네트워크 구축	0.563
2020	사모아	태평양소도서국 해양산성화 관측 및 대응 네트워크 구축	0.673
2016	페루	페루 해양기후 관측역량 강화사업('16-'19/700만불)	0.045
2021	태국	해양생태계 보전 국제협력 강화(IUCN 협력프로그램 운영)	0.301
2017	페루	페루 해양기후 관측역량 강화사업('16-'19/700만불)	0.002
201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사업	0.084

자료 : OECD CRS 각 연도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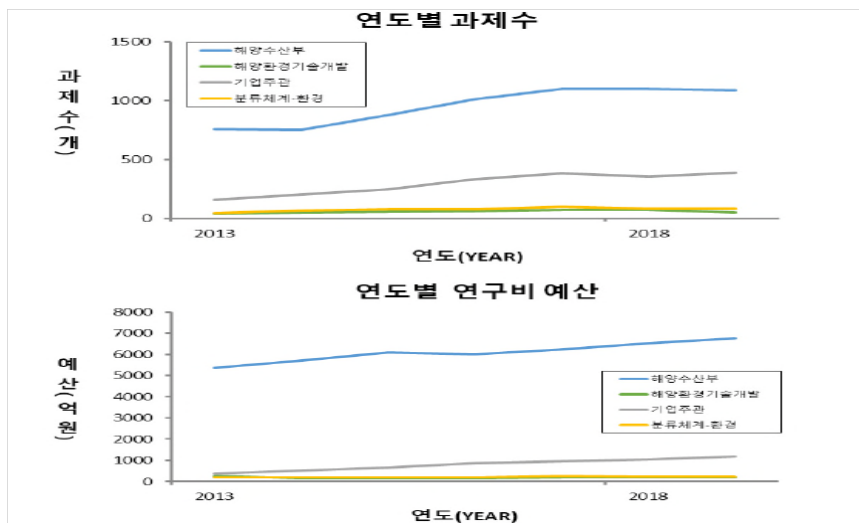
위의 <표 2-3>에 따르면 2010-2020년 기준 한국의 해양환경 양자 ODA는 주로 베트남(26%), 스리랑카(24%), 팔라우(15%), 인도네시아(10%) 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베트남 국가의 비율이 26%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주제 또한 해양환경 관리 역량강화, 해양산성화 관측,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 등 주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해양배출 즉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국가기본 계획 수립(2008)및 해양쓰레기 대응센터(2011)를 설치하여 종합적, 과학적 대응을 위해 연구와 정책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다양한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502억 원의 예산을 투입, 364,02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한 경험이 있다(최지원, 2013). 특히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거정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이며 외국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동 분야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통해 '여수프로젝트-남태평양해양오염 폐기물 처리사업'을 시작으로 한 해양쓰레기 분야 지원사업의 대상국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최지원, 2013)

2023년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예방·처리 문제가 국제적인 해양오염 현안으로 논의됨에 따라, 올해부터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협력하여 세계최대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인 필리핀, 동티모르 등을 대상으로 해양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 사업('23~'28, '23년 12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별상황에 있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차단시설, 수거차량, 집하장 등 관련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⁹⁾

아울러 한국의 해양분야 투자는 국가 성장과 개도국 협력 발굴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현재 부상하고 있다. 한기원 외(2021) 연구에 따르면, 해양환경 분야 한국의 R&D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 R&D 사업 중 해양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과제수와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해양환경 분야 기업 수행 과제는 전체 해양수산 R&D의 1/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해양수산 국가 R&D 현황



자료 : 한기원,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21, p. 115

9) 해양수산물, 「2023년 해양수산물 공적개발원조」, 보도자료, 2023.2.2

제2절 그린뉴딜 정책

1. 정책적 배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선언 동참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상향 등 논의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EU·미·일 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본격 추진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ODA 등 대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표 2-4〉 주요국가, 국제기구 그린 분야 정책

구분	대내	대외
EU	• 2050 탄소중립 선언('19.12월) • 향후 10년간 1조 유로 규모 투자	• ODA 재원의 25% 기후변화대응 투자
미국	• 바이든 대통령 공약으로 탄소중립 포함 • 향후 10년간 5조 달러 투자 계획	• 기후변화대응 지원 '21년 대비 4배 증액
일본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월)	• ASEAN 지역 NDC 달성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구축 등 패키지 전략 추진
WB	-	• 향후 5년간 50%를 기후변화대응 재원으로 편성

자료 : 각 기관별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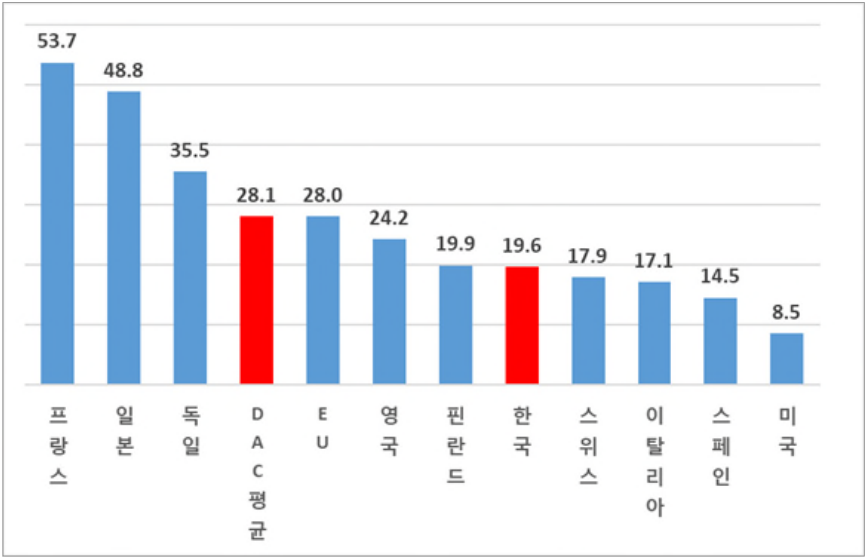
한국정부도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목표로 삼고,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법을 제정하였다. 2021년 8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였다(장영우 외, 2023). 이는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2050년까지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이행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2021년 7월 ‘그린뉴딜 2.0’을 발표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이주관 외, 2021).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도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그린뉴딜 ODA 전략’(21, 7월)’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국별 특성·취약분야 및 국가발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린분야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DAC 평균 이상으로 확대를 약속하였다¹⁰⁾.

〈그림 2-6〉 주요국 그린분야 ODA 비중(‘15~’19년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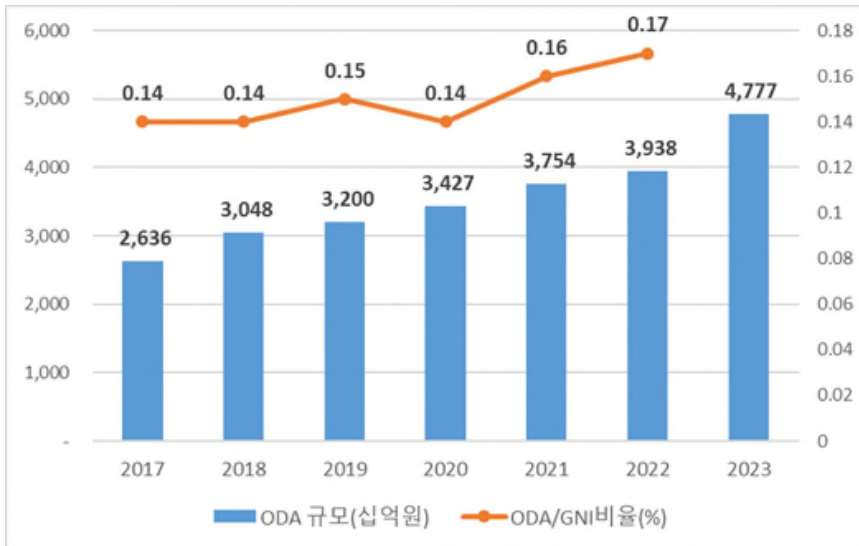
자료: OECD DAC 통계자료

10) 그린분야 ODA 비중: 한국 19.6%, OECD 28.1%(2015~2019년 평균)

2. 추진방향

2023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4조 7,771억 원으로 2022년 3조 9,383억 원 대비 21.3% 증가하였고, 총 45개 기관에서 1,84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관계부처, 2023).

〈그림 2-7〉 대한민국 ODA 예산 추이('17~'23)



자료: OECD DAC 통계자료

2023년 2월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그린 ODA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을 위한 ODA’라는 전략목표 아래, 전 세계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략적 그린 ODA를 추진하고 국제협력 선도를 천명하였다(관계부처, 2023). ‘그린뉴딜 ODA 추진 전략’(21.7월)’에 따라 민간 참여 확대 등 그린 OD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별·분야별 대표 사업모델 발굴 등 중장기적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관

계부처, 2023).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린분야 ODA 비중의 OECD DAC 평균 이상 확대를 목표로 개도국의 그린·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집중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 2023). 환경 분야 사업 외 물·위생, 교육, 지역개발 등 ODA 전 분야 사업 발굴시 기후변화 대응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기획하고 있다(관계부처, 2023).

3.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해양환경 관련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대응, △어촌특화개발, △해양플라스틱 관리, △수산업 발전, △해사역량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ODA예산은 287.3억원으로 전년도¹¹⁾ 대비 약 100% 증가한 수치이다.

〈표 2-5〉 해양수산부 ODA 예산

(단위: 억원)

ODA 시행기관	2022			2023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해양수산부	143.6	-	143.6	287.3	-	287.3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p. 169

이 중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위기에 더욱 취약한 만큼 ①해양조사-관측, ②모니터링-분석, ③위기 감지-예측, ④재생에너지 개발 등 탄소중립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 기후변화 양상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보완 사업을 지속 발굴 및 사업 간

11) 2022년도 예산은 143.6억원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사업 유형별로는 프로젝트 사업의 비중이 84.3%로 가장 높고, 프로그램(5.2%), 연수사업(8.3%), 기타기술협력(2.1%) 순으로 30개의 신규 및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 2-6〉 유형별 분류

(단위: 억원, %)

구분	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기술협력		기타
					연수 사업	기타	
'22년	143.6	109.8	-	11.4	20.3	2.0	0.1
	100	76.4	-	8.0	14.1	1.4	0.1
'23년	287.3	242.2	15.0	-	24.0	6.0	0.1
	100	84.3	5.2	-	8.3	2.1	0.04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p. 169

03

일본, EU, 국제기구의 해양환경 ODA 정책 및 사례

제1절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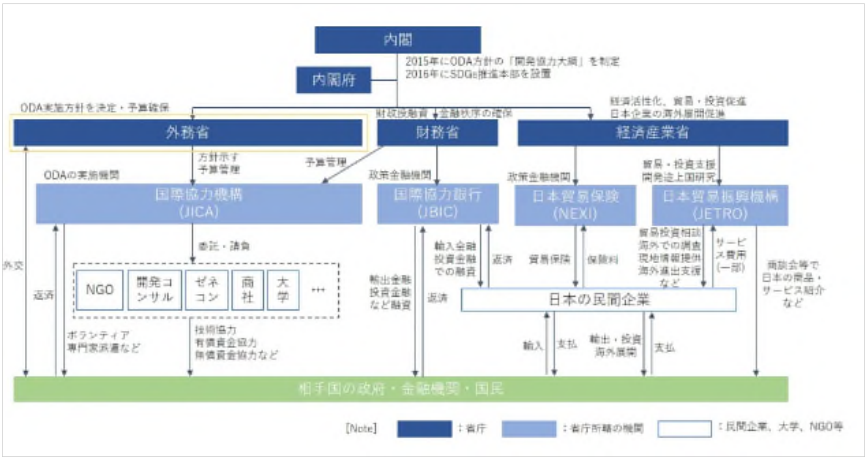
1. 일본 ODA 추진체제

일본의 ODA 사업 추진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를 통해 개발 및 경제협력이 유기적으로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무성 산하 JICA, 재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경제산업성 산하에 일본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일본무역보험(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해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 각 기관의 추진 체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 국제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은 JICA가 수행한다. 냉전기 일본의 개발협력 정책은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긴밀하게 연결된 가운데 외무성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발언권 강화, 재무성은 재원분배, 경제산업성은 해외에서

의 경제 이익 확대 측면에서 원조정책을 추진하였다.(문경영, 2019). 이러한 가운데, 냉전기 일본의 원조정책은 추진 체계적 측면에서 무상원조는 외무성, 유상원조는 주로 경제산업성이 담당하는 구조를 가졌으며,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원조를 일본의 경제적 국익 확대와 연계하려는 중상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였다(문경영, 2019).

〈그림 3-1〉 일본의 ODA 추진 체계 개요



자료: 일본 외무성(검색일: 2023.7.13)

각 기관의 역할은 목적과 체계와 따라 아래 <표 3-1>와 같이 명확하게 나뉜다. JICA는 단일 원조기관으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며, 일본과 세계 경제 발전 공헌에 목적을 두고 있다. JETRO는 일본 국내 및 각 국가에 설립한 사무소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 수원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외경제 교류를 촉진하는 등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JBIC는 1961년 개도국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해외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특이한 점은 ODA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는 않으나,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민간금융기관을 보완하여 개도국 투자를 확대 및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1〉 일본의 ODA 추진체계 내용

구분	국제협력기구 (JICA)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국제금융 (JBIC)
성격	• 독립 행정 법인	• 독립 행정 법인	• 주식회사
관할 부처	• 외무성	• 경제산업성	• 재무성
목적	• 국제협력 촉진 • 일본과 세계 경제 발전에 공헌	• 무역 확대 • 경제협력 촉진	• 개도국 자금 제공 • 해외경제협력 촉진
역할	•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 해외 무역 조사 및 연구	• 민간기관의 보완,
업무 내용	• 기술협력 • 유상 자금 협력 • 무상 자금 협력	• 해외→일본의 투자 촉진 • 일본 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	• 수출금융 • 수입금융조사연구

자료: 일본 외무성(검색일: 2023.7.13)의 내용을 근거로 저자 작성

2. 일본 해양환경 ODA 추진체계

JICA는 일본 해양환경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 JICA의 미션에서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22년 JICA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네 가지 미션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해양환경 보호(protecting the richness of nature and coastal areas)’이다. 이러한 해양환경 보호 과제에는 해양 플라스틱 제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 다양한 해양환경 문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JICA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JBIC의 금융기능을 활용하여 해양 환경 협력에 전방위적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왔다. 이와 관련된 JBIC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Global action for Reconciling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GREEN)」, 글로벌 투자 강화 시설 (Global Investment Enhancement Facility)이 있다. GREEN 운영 하에서 JBIC는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면서 대출, 보증 및 지분 금융의 형태로 개도국의 해양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GREEN 프로젝트에는 수원국 내 일본기업 해양환경 보전사업 지원, 카리브해 해양환경 관련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세네갈 해양 개발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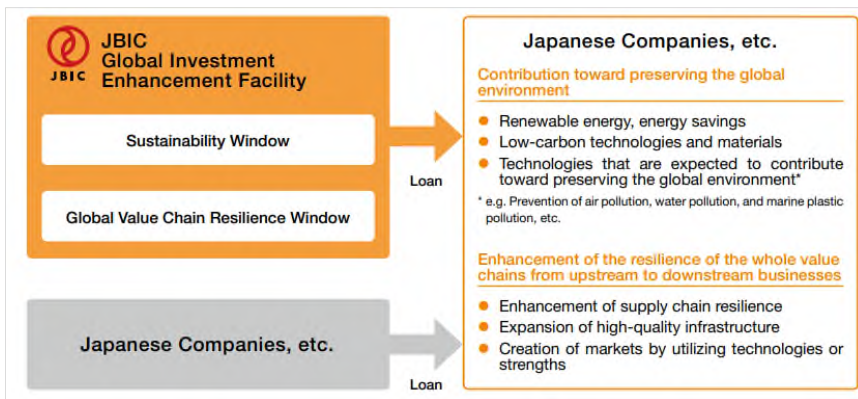
JBIC는 2022년 7월 환경과 첨단기술을 고유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글로벌 투자 강화시설(Global Investment Enhancement Facility, GIEF)을 설립했다. 해양플라스틱 오염 방지 등의 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에 민간자금이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능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속가능 성장에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저탄소 기술 사업 등에 대한 분야에 개별사업에 직접 출자한다. 둘째는 글로벌 가치 사슬 복원 부분인데 이들 사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 용자에 대한 보증을 하기도 한다.

JBIC의 해양환경 분야를 지원하는 구조는 <그림 3-2>와 같다.

일본기업에 대한 해외 정보 제공이나 대외경제교류를 촉진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JETRO는 해양 분야에서도 개도국과의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탄소 중립 사회를 장기 목표 설정함에 따라 JETRO도 이에 발맞추어 환경 혁신 전략 등 무탄소 사회를 위한 재생 에너지 촉진 등 산업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경 및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JETRO는 개도국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아시아의 대책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을 주기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¹²⁾

〈그림 3-2〉 JBIC의 해양환경 분야 글로벌 투자 강화 지원



자료: JBIC, *Annual Report*, 2022. p. 79 연례 보고서

3. 일본의 해양환경 ODA 정책¹³⁾

일본의 해양환경 부분의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각은 1980년대 말 국제사회의 담론 및 움직임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곽성일, 2013). 해양환경 ODA를 개발의제에 포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는 일본은 2019년 6월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G20 의장국으로서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추가 오염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을 공유했다.

12) Foreign Press Center Japan(검색일: 2023. 7. 15)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13) 일본 외무성(검색일: 2023.7.13)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그림 3-3〉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 개요



자료: Steve Fletcher, "Policy options to eliminate additional marine plastic litter by 2050 under the G20 Osaka Blue Ocean Vision", 「UN environment Programme 패널」 University of Portsmouth, 2023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능력 구축 및 인프라 정비 등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표명하고, 세계 전체의 실효적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①폐기물 관리(Management of Wastes), ②해양 쓰레기의 회수(Recovery), ③이노베이션(Innovation), ④능력 강화(Empowerment)에 초점을 맞춘 「마린 이니셔티브(Marine Initiative)」를 선언했다. 마린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2〉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표 3-2〉 일본의 마린 이니셔티브 정책

구분	내용
양·다자 ODA를 통한 지원	• 양·다자 ODA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폐기물 관련 역량 및 제도 개발 • 2025년까지 전 세계 폐기물 관리에 종사하는 10,000명의 공무원에게 교육을 제공
일본 기업, NGO 및 지방 정부의 국제 활동	• 일본기업, NGO,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등 인프라 수출 촉진을 위한 혁신 및 기술 도입 • 일본해양환경계획(JaIME)에 의한 아시아 신흥국의 플라스틱 관리 개선 지원

구분	내용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	• 국제회의(UN 해양 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포럼 등)를 통해 해양쓰레기 회수 및 혁신에 관한 일본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공유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지역지식센터(Regional Knowledge Centre on Marine Plastic Debris) 구축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퇴치 대책에 대한 지식 공유 전파

자료: 일본 외무성(검색일: 2023.7.13)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일본은 이니셔티브 하에서 위 표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폐기물 관리, 해양 쓰레기의 회수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주요 20개국 모임(G20)의 의장국이었던 2019년에 체결된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을 통해 G20 각국은 포괄적인 생애주기 접근법을 적용하여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추가 발생을 2050년까지 완전히 없앤다는 자발적 책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G20 실행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여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 실현을 위한 각국의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협력을 촉진했다. 그 결과 2019년 10월 G20 자원 효율성 대화 2019 및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조치를 위한 G20 이행 프레임워크의 후속 조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이행체계를 바탕으로 각국의 시책과 우수사례를 보고·공유하였으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상호 연구를 통해 시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 일-ASEAN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ASEAN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일본은 2019년 8월부터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조사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일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9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9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2019년 11월 베트남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지역 시범 공동조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 ASEAN 국가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을 중심으로 환경 보전을 위한 인재 육성, 계몽, 홍보 활동 등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ASEAN 통합기금(JAIF)의 기여 하에 베트남자원환경부, 일반재단법인 NHK 인터내셔널, 공익재단법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 등 다양한 단체를 통한 ASEAN 회원국의 행동 계획 책정이나, 어업으로부터의 해양 쓰레기의 감시와 삭감을 위한 지역 공동 연구와 능력 구축, TV 프로그램의 작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에 관한 방콕 선언 2019 이행을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일본의 해양환경 ODA 추진 현황¹⁴⁾

일본의 해양환경 ODA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일반 ODA의 현황을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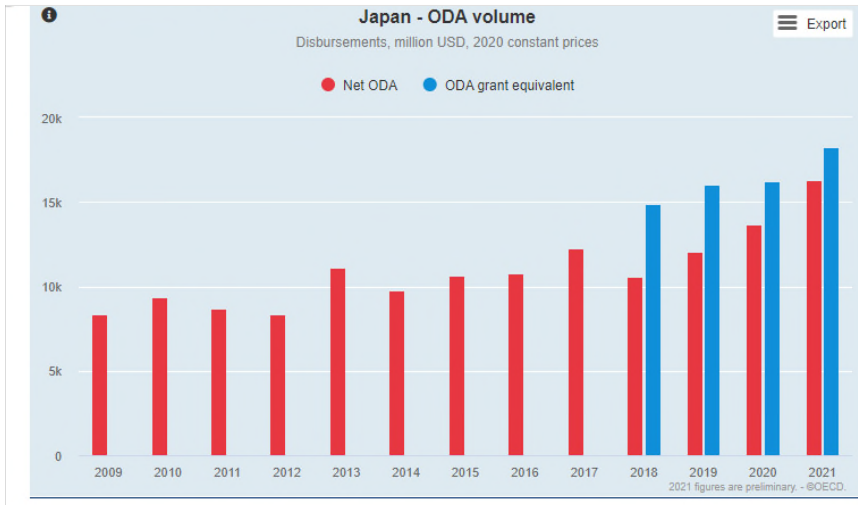
일본은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배상과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가입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였다(이구성, 2011). 1991년 원조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0년까지 최대 원조 규모를 유지하였다(이구성, 2011). 그러나 2000년대에 시작된 장기불황과 재정악화로 2006년에는 영국에 2위 자리를 내준 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5위를 유지하고 있다(이구성, 2011). 또한 절대규모의 축소와 더불어 ODA/GNI 비중도 1984년 0.3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그림 3-4>과 같이 2008년 0.19%로 급감하였다. 2011년 3월 12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일본의 ODA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이구성, 2011).

14) OECD ilibrary(검색일: 2023.7. 10.)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일본은 2021년에 176억 달러의 ODA를 제공했으며, 이는 GNI의 0.3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20년보다 실질 12.1% 증가한 것이며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일본의 ODA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규모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2020년 일본의 ODA 포트폴리오 중 39.3%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60.7%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2021년 일본은 ODA 규모에서 3위,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중 12위에 올랐다. 일본 ODA의 대부분은 공공 부문을 통해 양자 간 지원이며, 절반 미만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최빈개도국(LDCs)과 중저소득 국가로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높은 비중(총 양자 ODA의 36%)이 취약한 지원의 황에 사용되었다. 일본의 ODA 투자는 주로 경제 인프라와 서비스에 투자됐으며, 양자 국가 프로그램 가능 원조(81.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4〉 일본의 OD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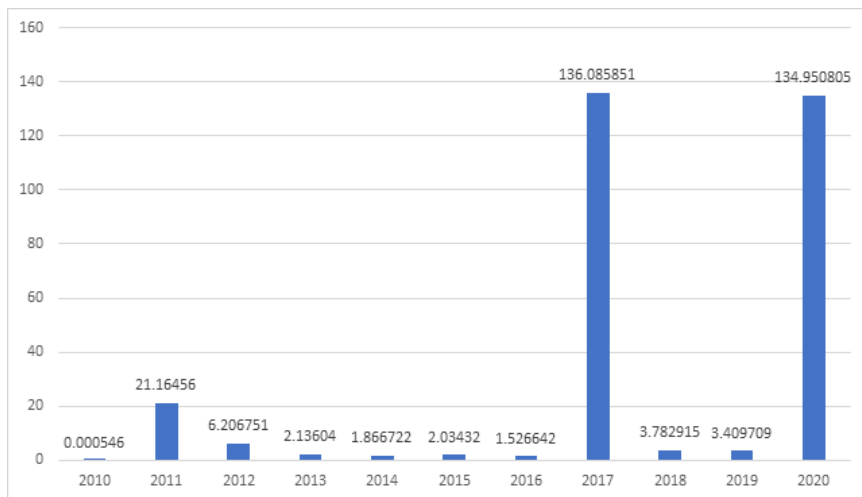
자료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EU((검색일 : 2023.07.17.)

일본은 2020년에 양자간 ODA로 지원했다. 양자간 총 ODA는 전체 ODA의 83.2%였으며, 총 양자 ODA의 10%는 다자간 기구(지정된 기여금)를 통해 전달되었다. 일본은 총 ODA의 16.8%를 다자기구에 대한 핵심 기여금으로 할당하였다.

다음은 일본의 해양환경 ODA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일본이 수원국에 공여한 총 ODA액은 1,1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원국에 공여된 해양환경 ODA는 3억 1천 달러로 전체 ODA 가운데 0.26%를 차지했다. 일본의 해양환경 ODA규모는 2020년 기준 1억 3천만 달러로 19년 대비 약 97%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주로 인도에 대한 지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일본의 해양환경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OECD CRS 각 연도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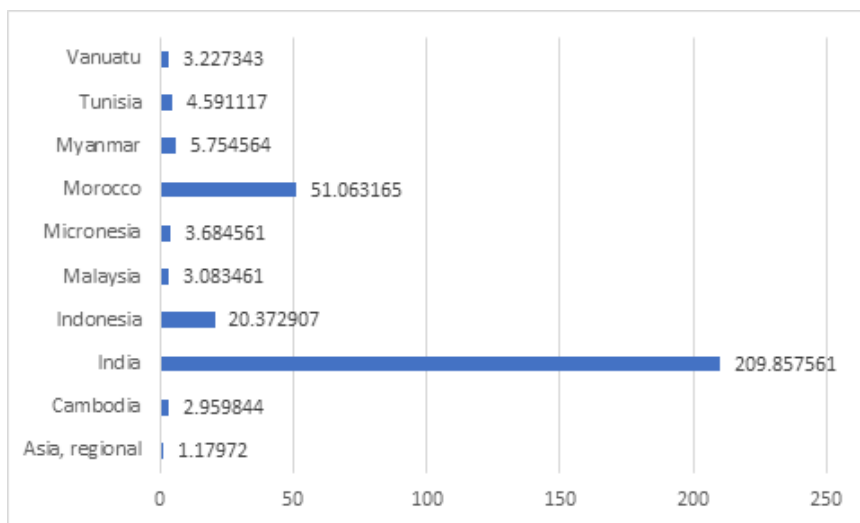
특히 2017년과 2020년에 ODA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로코(모로코 수산자원관리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과학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선박 건설 지원)와 인도(선박재활용을 위한 환경 관리 고도화)의 ODA사업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2010~2020년 기준 일본의 해양환경 양자 ODA는 주로 인도(68%), 모로코(17%), 인도네시아(7%), 미얀마(2%)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일본의 해양환경 ODA 상위 10개 국가(2010-2020)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OECD CRS 각 연도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일본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례

일본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업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의 해양환경 ODA 사업은 크게 생태계 복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기자재 설치

및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표 3-3〉 일본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업 현황(2012~2020)

수원국	프로젝트명(기간)	주요 내용
인도	구자라트 생태계 복원사업 (2020)	맹그로브와 연안 개발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복원 및 향상
캄보디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퇴치 프 로젝트(2020)	쓰레기 처리 인식 제고 사업 시행
아세안	아세안 도시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 지원(2020)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문제 해결을 통한 아세 안 도시 환경 영향 감소
마이크로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추크라군 (Truk Lagoon) 해역 기름 유출 대책 사업(2020)	침몰선 기름누출 실태 조사 및 기름 제거
모로코	해양수산업연구선 건조사업(2017)	모로코 자원 관리 분야 과학적 역량 강화
인도	선박재활용을 위한 환경관리 고 도화(2017)	선박 재활용 시설 업그레이드
피지	방조제 개선 프로젝트(2016)	방조제 건설
세네갈	해양자원관리센터 건립사업 (2013)	센터 건설 및 장비 설치
미얀마	맹그로브 재활 및 관리 프로젝 트(2012)	맹그로브 복구 및 재해 관리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이집트	태양광 발전설비(2011)	솔라보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팔라우	암초 환경 교육 프로그램 (2011)	암초 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료 : OECD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에서는 일본의 수원국 해양환경 ODA 성공사업으로 알려진 ‘구자라트 생태계 복원사업(Project for Ecosystem Restoration in Gujara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사업은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서식처 기능을 개선 및 복원하여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및 회복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

안선 관리, 취약한 생태계 관리,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관리 등을 프로젝트 주요 구성 요소로 진행하여 인도 구자라트의 생태계가 크게 개선됐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환경 논의에 있어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해양환경 ODA 역시 해양·미세 플라스틱 저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과 해양 환경으로의 누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아세안도시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아세안 도시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지원(Closing the Loop: Scaling up Innovation to Tackle Marine Plastic Pollution in ASEAN Cities)’이 대표적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플라스틱 오염원의 75%는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에서 발생하고 25%는 도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누출에서 발생한다.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최대 95%는 주요 강을 통해 운반되며 그 중 8개는 아시아에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ASEAN 행동강령의 현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를 보다 순환적으로 만들어 회수율을 높이고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줄여 SDG 11, 12 및 14의¹⁵⁾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 공여기관과의 협력 및 조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ODA의 공여방식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 대응에 있어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해양환경 ODA 역시 지속가능한 사업에 역점

15) UN Global Compact에 따르면, SDG 11-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을 목표, SDG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SDG 14-해양 생태계 보호이다.

을 두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 연구선을 건조함으로써 생태계 접근과 해양 환경 및 수산 자원 모니터링에 기반한 역량을 강화하여 수원국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모로코를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연구선 건조사업(Oceanographic and Fishery Research Vessel Construction Project)’ 이 대표적이다. JICA는 2017년 1월, 모로코 국립수산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Reserch)와 약 551억 원의 유상원조 ODA(ODA loa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선진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연구 선박을 건설함으로써 모로코 수산자원관리 분야의 과학적 역량을 강화하며,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했다. 이외에도 선박 운항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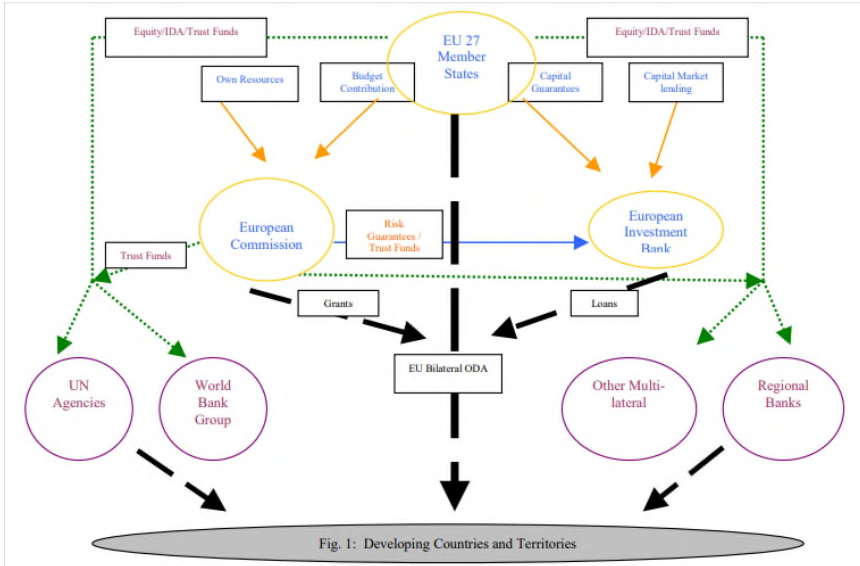
제2절 EU

1. EU의 ODA 추진체제

EU의 추진체제는 크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로 구성되며 EU의 양·다자 개발 협력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을 두 개의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개발 협력을 위한 EC의 자금은 i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대표하는 유럽 개발 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EDF)과 ii 공동체 기금(Community)의 출처에서 자금이 조성된다. EC의 개발 협력 기금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 지역의 78개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7〉 EU의 ODA 추진 체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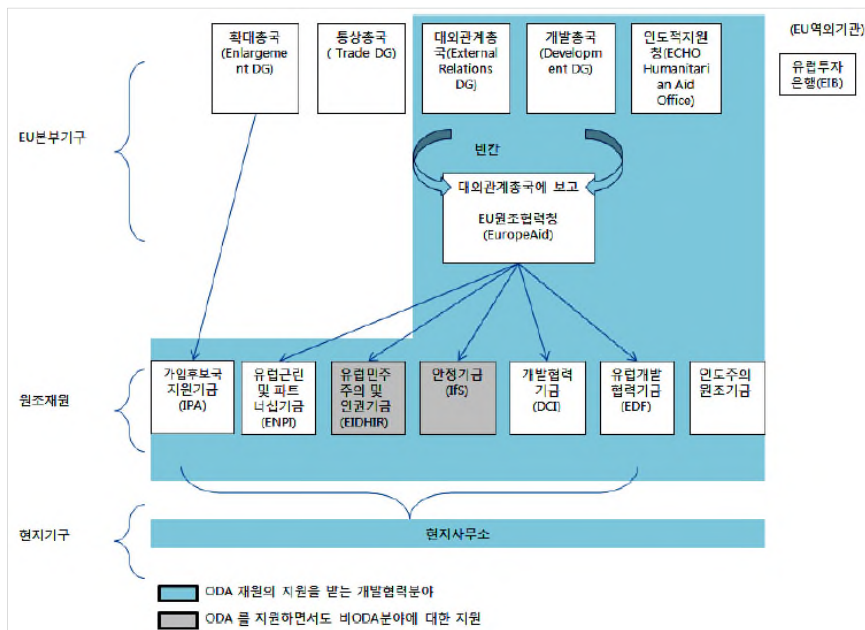
자료: Florian Kitt, EU Aid Architecture: Recent Trends and Policy Directions, 2010. p. 2.

유럽투자은행(EIB)은 1958년 1월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금융기관으로 설립됐으며 EU 역내 저개발지역의 개발 및 발전을 원조하면서 장기투자 사업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일반적으로 회원국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총재회의다. 이런 총재회의는 회원국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산하에 운영 이사회를 두고 있다. 총재회의는 주로 대출관련 정책 지침을 정하고 EU 역외 사업에 대한 은행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정성춘, 2010). 그리고 운영이사회는 유럽투자은행에 의한 대출·보증과 관련한 결정권한을 비롯하여 은행이 총재회의에서 결정된 지침 및 EU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되는지를 책임진다(정성춘, 2010).

2. EU의 해양환경 ODA 추진체제

EU의 해양환경 정책의 개발과 채택은 EC,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EC 내부에는 여러 정책분야를 담당하는 총국(Directorate-General, DG)이 있는데, 해양환경(marine environment) 분야는 주로 환경총국(DG Environment) 기후총국(DG CLIMA), 에너지 총국(DG ENERGY)이 담당한다.

〈그림 3-8〉 EU의 해양환경 ODA 추진 체계 개요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과 EU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2022. p. 271

환경총국은 EU의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유럽 위원회의 사무국이며 1981년 설립됐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점차 중요해 지자 2010년에 기후총국이 환경총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총국으로

신설되었고, 에너지총국은 2010년 2월 17일에 교통총국(DG Transport)로부터 분리되어 창설되었으며 독립된 조직이 되었다.

새로운 해양 환경정책은 보통 EC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는데, EC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하여 기존 해양 환경정책의 변화 또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해 “대화문 (Communication)”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대화문을 채택하기 위해 EC는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 EC가 마련한 규정, 지침 등의 법령안은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로 제출된다.

3. EU의 해양환경 ODA 정책

해양환경 ODA에 대한 EU의 방향성은 EU의 해양, 연안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EU 정책 움직임과 평행하게 움직인다. EU는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천연자원, 어족자원, 경제적 활성화 등 다양한 기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해양·해안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EU는 해양전략기본법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이하 MSFD)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본 지침의 주요 목적은 EU 해양이 ‘좋은 환경적 상태’(Good Environmental Status, 이하 GES)를 달성하는 것이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면서, 관련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지침에는 해양 환경의 정기적인 평가, 목표 설정,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립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조치는 인접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야 한다.

총 5개의 장과 27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MSFD에는 기본적인 정책방향, 해양전략 시행에 따른 대비사항, 조치 프로그램, 보고체계, 정보공개, 인접 국가와 협력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2에는 ‘좋은 환경적 상태’ 판단기준, 해양환경 목표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¹⁶⁾ 특히 GES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EU는 GES를 “깨끗하고·건강하고·생산성이 높은, 생태·환경적으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해양 환경 상태”로 정의한다. 즉 GES는 해양 자원의 다양한 사용이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수행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회원국들은 GES를 달성하였을 때, 해양환경의 상태를 명시하는 11개의 설명어(descriptor)를 부속서 1 제시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명어 1: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한다.
- 설명어 2: 외래종이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 설명어 3: 대표어종들의 자원량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 설명어 4: 먹이 그물(food web)상 요소들은 장기적인 풍요와 번식을 보장한다.
- 설명어 5: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부영양화는 최소화 시킨다.
- 설명어 6: 깨끗한 해저 상태로 생태계의 기능을 보장한다.
- 설명어 7: 수계의 영구적인 변화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설명어 8: 오염 물질의 농도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설명어 9: 사람의 섭취하는 수산물의 안전하다.
- 설명어 10: 쓰레기는 해양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 설명어 11: 해양에너지의 도입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 EU(검색일 : 2023.07.12.)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표 3-4〉 EU 해양전략기본지침((2008/56/EC) 체계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주제 제2조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해양 지역 및 소지역 제5조 해양전략 제6조 협력 제7조 주무기관
제2 장 해양전략 : 대비	제8조 평가 제9조 '좋은 환경적 상태' 판단기준 제10조 해양환경 목표 설정 제11조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12조 보고 및 위원회 평가
제3장 조치 프로그램	제13조 조치 프로그램 제14조 예외사항 제15조 공동대응 권고사항 제16조 보고 및 위원회 평가
제4장 업데이트, 보고서 및 공개 정보	제17조 업데이트 제18조 중간보고 제19조 외부 자문 및 정보 제20조 위원회 보고서 제21조 보호 구역에 대한 경과 보고서 제22조 예산조달 제23조 검토사항
제5장 최종 조항	제24조 규제 위원회 제25조 시행대비 조치 제26조 발효시기 제27조 대상국
부록 : 1,2,3,4,5,6	

자료 : EU Law(검색일 : 2023.07.12.)

이와 더불어, EU는 2023년 2월, 수산분야에서 해양 생태계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수산업을 위한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EU Action Plan: Protecting and restoring marine ecosystems for sustainable and resilient fisheries)' 이라는

이름으로 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¹⁷⁾. 본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는 ‘어족자원을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해저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업 최소화’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어종에 대한 어업 영향 최소화’입니다. 이와 연관된 주요 행동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해양 보호 구역(MPA)에서 저인망 어업의 단계적 폐지’, ‘과학적 정보, 연구 및 혁신 강화’, ‘해양의 모니터링 및 보호조치 강화’,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및 지원 활동 개선’ 등이다.

EU는 또한 해양환경 ODA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몇 가지 핵심 원칙에 의해 접근한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이다. SDGs는 2015년 9월 2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이다.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중 SDGs의 목표 14는 해양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SDGs 14는 대양, 바다, 해양 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는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목표 14와 일치시켜 진행한다.

〈표 3-5〉 SDGs의 연계성(UN 발표)

SDGs	상세 내용
목표 14 해양 생태계 보호	14.1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14.2 해양과 연안 생태계 보호, 복원 조치 시행
	14.3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
	14.4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어획규제 및 IUU 어업 종식

17) EU(검색일 : 2023.07.12.)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SDGs	상세 내용
	14.5 법과 과학적 정보에 기초한 연안, 해양 보전
	14.6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수산보조금 금지
	14.7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최빈개도국 경제적 이익 증대
	14.a 최빈개도국 해양건강성을 위한 해양 관련 과학기술, 연구역량 발전 및 기술 이전
	14.b 소규모 영세 어업인에 대한 해양자원, 시장 접근 지원
	14.c UN해양법협약 이행을 통한 해양과 해양 자원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강화

자료: 통계청(검색일자: 2023.7.13.) 바탕으로 재구성

두 번째로는 EU의 "Blue Economy Strategy"이다. 이는 "청색경제 전략"으로 번역되며,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적인 전략이다. 여기에는 해양 재생에너지, 어업과 양식업, 연안 관광, 해양 생물 기술, 해상 운송 및 기타 해양 관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UN에서 처음 소개된 'Blue Economy'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보존하면서 경제 성장, 생계 개선, 일자리를 위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으로¹⁸⁾ 정의 될 수 있으며, EU는 2021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U의 새로운 청색경제 전략을 세웠다. 본 전략에는 탈탄소, 해양자원의 보존, 순환 청색경제, 폐기 감소, 책임 있는 식량 생산 등에 대한 청색경제의 의제가 담겨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 이행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18) UN(검색일 : 2023.07.12.)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표 3-6〉 EU 청색경제 전략(COM/2021/240 final) 체계

Transforming the EU's Blue Economy for a Sustainable Future	
1. Making the transition from 'blue growth' to a 'sustainable blue economy'	
2. Transforming the blue economy value chains	2.1 Achieving the objectives of climate neutrality and zero pollution
	2.2 Circular economy and preventing waste
	2.3 Biodiversity and investing in nature
	2.4 Coastal resilience
	2.5 Responsible food systems
3.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blue economy	3.1 Ocean knowledge
	3.2 Research and innovation
	3.3 Investment
	3.4 Blue skills and jobs
4. Creating the conditions for sustainable governance	4.1 Maritime spatial planning
	4.2 Citizen engagement and ocean literacy
	4.3 Sea basins, reg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for coastal regions
	4.4 Maritime security
	4.5 Promoting a sustainable blue economy abroad
5. Conclusion	

자료 : EU Law(검색일 : 2023.07.12.)

특히 청색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및 무공해 목표 달성’, ‘해양 환경의 순환경제로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자연에 대한 투자’, ‘기후 적응 및 연안 복원력 지원’,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보장’, ‘해상 공간 관리 개선’ 등의 세부 의제를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정책노력이 보인다¹⁹⁾.

EU에서는 또한 현재 정책 분야 중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회원국과 기업에게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EU(검색일 : 2023.07.17.)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EU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저감과 재활용 확대를 증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이해 관계자 세미나, 청문회를 진행하여 2018년 1월 플라스틱 전략(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을 발표했다.

〈그림 3-9〉 EU 해양환경 부문의 플라스틱 전략



자료: EU(검색일자: 2023.8.1.)

이를 위해 구체적 실행 전략을 4개 분야로 제시한다. i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제성 및 품질개선: 플라스틱 재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도입 및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 기준을 개발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선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ii 플라스틱 쓰레기와 투기 억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어구용품 등 플라스틱의 해양 유출 방지 및 미세플라스틱의 의도적 첨가를 규제하고, 해양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육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iii 투자 및 혁신 주도: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 기금 설립 타당성을 검토

하고, EU전략펀드, 구조기금, Horizon 2020 등을 통해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및 혁신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회원국과 기업들에게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iv 국제 대응 활동: 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개도국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및 해양 투기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세계 주요 하천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협력하며, UN, G7, G20 등 국제 다자 이니셔티브, 지역 해양협약 등을 통한 활동을 강화하고, 非EU국가들과의 환경, 산업 부문 정책 대화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지원한다.

그리고 EU는 환경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도 중시하지만 개도국의 개발 사업에서 해양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해양환경 주류화(Marine Environmental main-streaming)에 국가적 관심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EU는 2007년도에 ‘EC 개발 협력에 대한 환경 통합 핸드북(Environmental Integration Handbook for EC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간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에 환경주류화를 고려하는 이행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2009년 2007년 지침을 개정한 ‘개발협력에 대한 환경 및 기후변화 통합 지침(Guidelines on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지침을 통해 EU는 개도국 개발원조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정성춘, 2010).

4. EU의 해양환경 ODA의 추진 현황²⁰⁾

EU는 관련 기관과 회원국을 합쳐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 중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과 모든 부문에서 개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EU 기관 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 조달을 관리하며, 유럽대외협력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은 외교 정책을 조정한다.

2017년 EU는 ‘유럽개발협약’(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²¹⁾. SDGs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본 협약에는 향후 EU의 ODA 협력을 위한 공유된 비전과 행동계획을 정의했다. 본 협약에는 빈곤 퇴치를 주요 개발 목표로 재확인 되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계성과 함께 평화, 안보,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른 유럽 정책 간의 연관성을 강조되기도 했다. 특히 본 협약은 구성하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P’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양성 평등, 이동성 및 이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투자 및 무역, 좋은 거버넌스, 민주주의, 법치와 인권, 개도국의 혁신적인 참여, 국내 자원 동원과 같은 중요한 교차 요소들도 보여준다.

20)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EU((검색일 : 2023.07.17.)

21)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 2023.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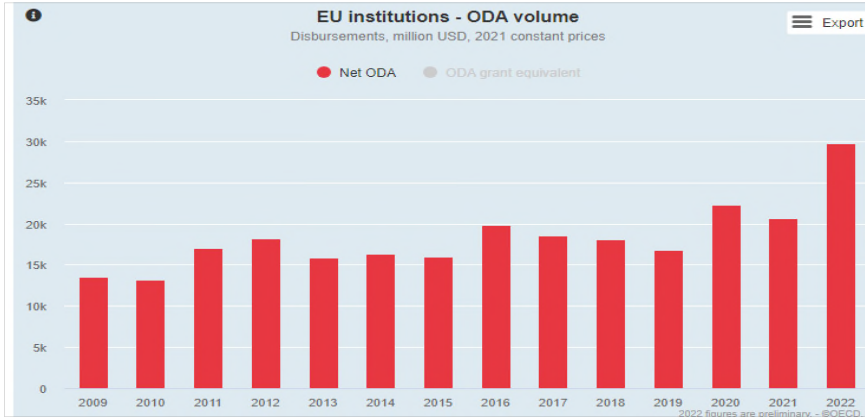
〈그림 3-10〉 유럽개발협약(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체계도



자료 : EC(검색일 : 2023.07.17.)

EU의 ODA 규모는 2022년에 297억 달러로 21년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DAC 회원국 중 3번째로 ODA 규모가 크며, 대부분 양자원조 형태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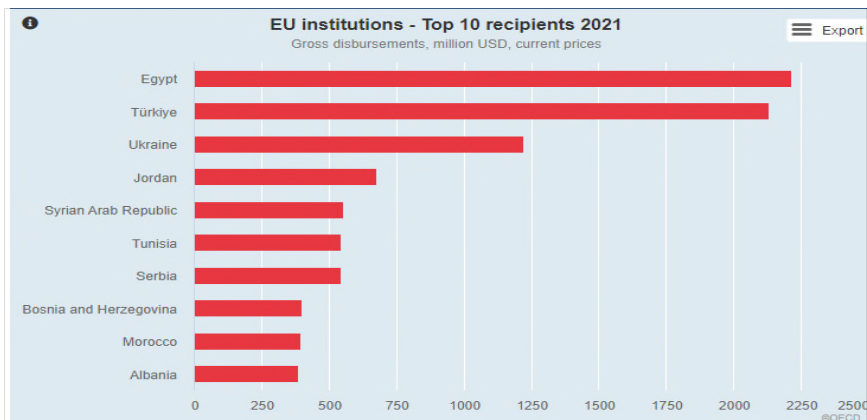
〈그림 3-11〉 EU ODA 규모



자료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EU((검색일 : 2023.07.17.)

2021년 기준 EU의 양자 ODA는 주로 아프리카(37.1%), 다른 유럽 국가(25.9%) 그리고 아시아(10.5%) 3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빈개발도상국가(Least Developed Countries)들에게 총 ODA 18.5%가 들어가고 있다. 국가로는 이집트, 터키, 우크라이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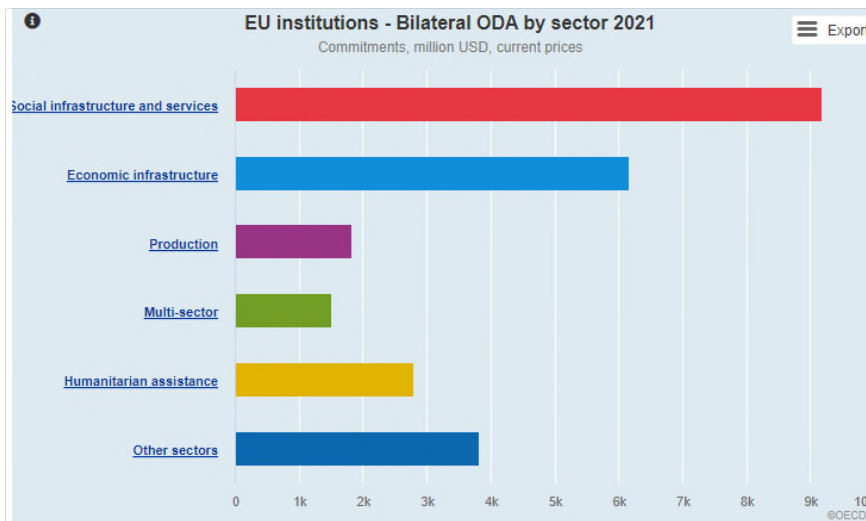
〈그림 3-12〉 EU ODA 상위 10개 국가



자료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EU((검색일 : 2023.07.17.)

2021년 EU의 양자 ODA 중 약 36%는 ‘사회 기반 시설 및 서비스’(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에 할당되다. 정부 및 시민 사회(3억 달러), 보건(2억 달러) 및 교육(9억 달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에 약 24%가 할당되었으며, 은행 및 금융 서비스(1억 달러), 운송 및 보관(3억 달러), 에너지(24억 달러)에 중점을 둔 양자 ODA 약속(4억 달러)의 총 6.2%를 차지했다. 양국간 인도적 지원은 2억 달러 전체 ODA의 11%에 달했다.

〈그림 3-13〉 EU ODA 분야



자료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EU(검색일 : 2023.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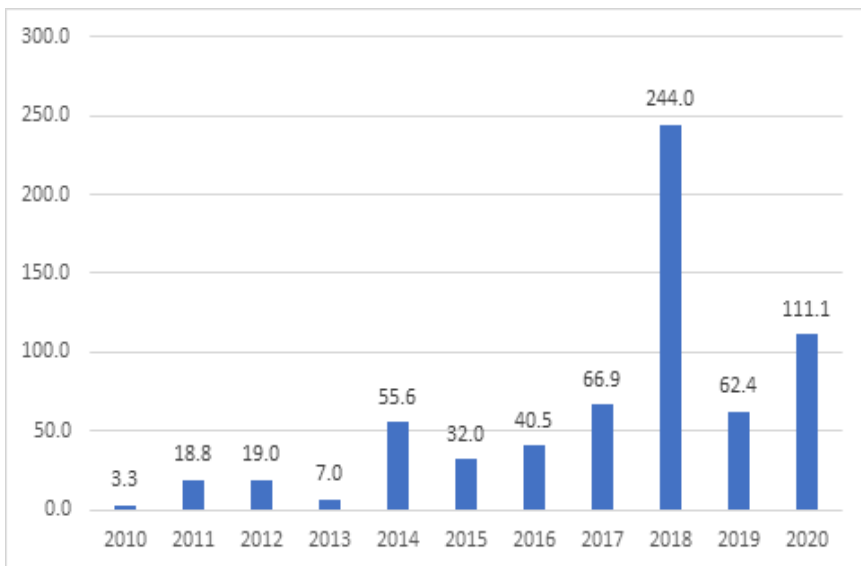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EU가 수원국에 공여한 총 ODA액은 1,9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원국에 공여된 해양환경 ODA는 6억 6천 달러로 전체 ODA 가운데 0.34%를 차지했다. EU의 해양환경 ODA규모는 2020년 기준 1억 1천만 달러로 19년 대비 약

94% 증가한 수치이다.

2010년부터 EU의 해양환경 ODA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레바논의 해양 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 등 2014년 5천 5백만 달러가 확인됐으며 2018년에는 카리브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및 해양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 수치가 확인된다.

〈그림 3-14〉 EU의 해양환경 OD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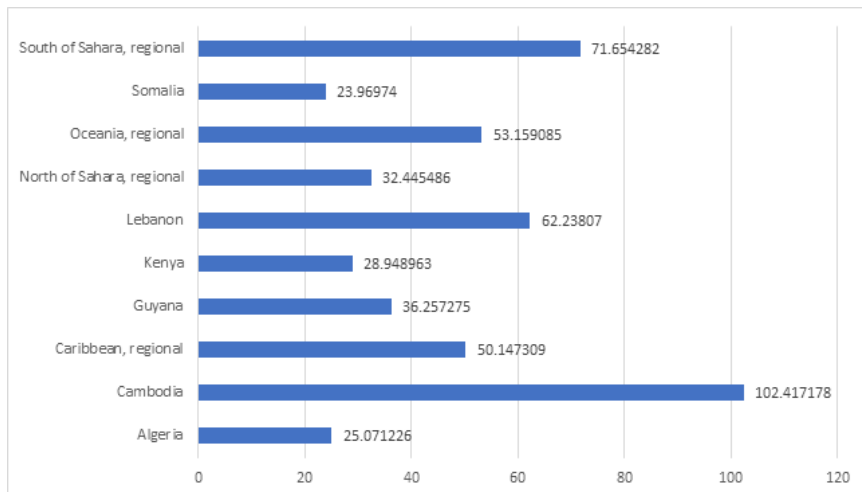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OECD CRS 각 연도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0~2020년 기준 EU의 해양환경 양자 ODA는 주로 캄보디아(21%), 사하라 남쪽(15%), 레바논(13%)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오세아니아, 카리브해 지역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EU의 해양환경 ODA 상위 10개 국가(2010~2020)



자료 : OECD CRS 각 연도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EU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례

EU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업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EU의 해양환경 ODA 사업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물 다양성 강화, 해양 환경 보존, 해양 자원 보호 등으로 빈곤국의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근거하고 있다.

〈표 3-7〉 EU의 주요 해양환경 ODA 사업 현황(2012~2020)

수원국	프로젝트명(기간)	주요 내용
카리브해 12개 국가	카리브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및 해양 생물다양성 프로그램(2019~2023)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관리 개선 강화
자메이카	기후 복원 프로젝트(2020)	자메이카 생태계의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

수원국	프로젝트명(기간)	주요 내용
모리셔스	모리셔스 프로젝트(2020)	습지 및 맹그로브 생태계를 포함한 섬의 자연 생태계 보존 및 복원
알제리	블루 이코노미(2020)	해양 환경 보존 및 어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지원
수리남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수리남 2단계 프로젝트(2019)	지속 가능한 사용 및 해안 생태계 관리를 통한 복원력 강화
캄보디아	해양 부문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캄보디아 프로그램(2018)	해양 자원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및 부가가치 창출 목표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그램(2018)	생태계 기반 연안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및 재해 위험 감소 복원력 구축
쿠바	쿠바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그램(2018)	생태계 기반 적응을 통한 쿠바의 기후변화 해안 복원력 강화
사하라 남쪽	청색 경제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2018)	수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물 다양성 강화
유럽근린남국가*	유럽근린 국가 환경 프로그램(2017)	해양 오염, 해양 생물 다양성 손실 해결
감비아	감비아 글로벌 기후변화 프로그램(2017)	기후 탄력적 해안 및 해양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지원
레바논	해양 자원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2014)	연안 지역의 해양 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강화
사하라 남쪽	생물 다양성 관리(2012)	지속 가능한 참여 관리를 위한 해양 및 생태계 관리 역량 강화

주: 유럽근린남국가는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를 의미함.

자료: OECD D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U의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잘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한 사례가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EU의 수원국 해양환경 ODA 사업 중 하나인 ‘카리브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및 해양 생물다양성 프로그램(11th EDF Caribbean OCT Regional Program, RESEMBID)’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카리브해 OCT²²⁾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해양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에 2015년 2월 카리브해 OCT 지역 회의(the Caribbean OCT Regional Conference)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일환으로 제11차 유럽개발기금(EDF)의 모든 자금을 카리브해 OCT에 할당하기로 EU는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의 세 가지 핵심 목표는 에너지 소비가 큰 인프라 위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관리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카리브해 OCT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다. RESEMBID는 EU가 자금을 지원하고 프랑스 정부의 개발 협력 기관인 Expertise Fiance가 시행하여 기후회복력 18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11개,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에 17개 총 48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카리브해 OCT 지역 내에 해양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이와 관련된 복원 및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및 연안 해양 생태계로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재해 위험 감소 역량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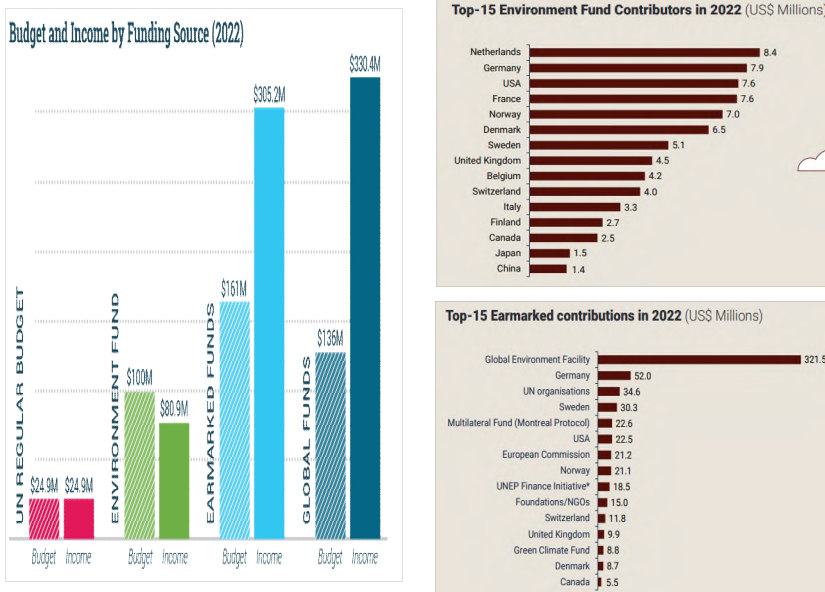
22) 카리브해 OCT, 즉 앵귤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몬트세라트,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아루바, 보네르, 쿠라사오, 사바, 신트 유스타티우스, 신트마르틴, 생바르텔레미의 지속 가능한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제3절 국제기구

1. 유엔환경계획(UNEP)²³⁾

1972년에 설립된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이하 UNEP)은 기후 변화, 자연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193개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국제 기구이다. UNEP는 과학적 연구, 정책 지원,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6〉 UNEP 공여국 및 기금 현황



자료 : UNEP 홈페이지(검색일 : 2023.10.2.)

23) UNEP 홈페이지, <https://www.unep.org/explore-topics/ocean-coasts>(검색일 : 2023.10.2.)

UNEP는 다양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회원국 및 관련 기관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유엔정기예산(UN Regular Budget), 환경기금(Environment Fund), 지정기여기금(Earmarked Contributions) 형태로 자금지원을 받는다. 특히 환경기금은 UNEP의 핵심 기금으로, 총 기부금의 15%를 차지하면 이를 통해 UNEP의 주제별 하위 프로그램 및 사업들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며, 상위 공여국가로는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이 있다.

UNEP는 해양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일례로 ‘육상기반 활동에 대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Global Programme of Action from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이하 GPA)는 정부 간 협력체제로 해양오염의 발원지인 육지, 내수면, 해안, 해양 생태계를 연결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1995년부터 설립되어 운영해온 GPA는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주요 오염원(오수, 유기오염물질, 방사성 물질, 중금속, 기름, 영양분 오염, 쓰레기, 서식지 파괴 등)을 파악했으며,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해양 협약 및 실행 계획’ (The Regional Seas Conventions and Action Plans, 이하 RSCAPs)는 지역별 협력체제로 글로벌 해양 의제를 전달하고 블루 이코노미와 같은 새로운 현안,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촉진한다. 지역정부, 과학 공동체 및 시민 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해양 및 연안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 산호초의 보호, 해양보호구역 지원, 깨끗한 바다 캠페인(Clean Seas)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양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2.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기구(PEMSEA)²⁴⁾

1993년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이하 GEF)의 후원으로 진행된 국제 물 프로젝트인 ‘동아시아해양의 해양오염의 방지와 관리(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Pollution in the East Asian Seas)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1999년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기구(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이하 PEMSEA)은 설립되었다. PEMSEA는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손실, 해양 자원 고갈, 수질 악화, 연안 및 해양 지역의 다양한 갈등 증가 등에 통합적으로 접근 및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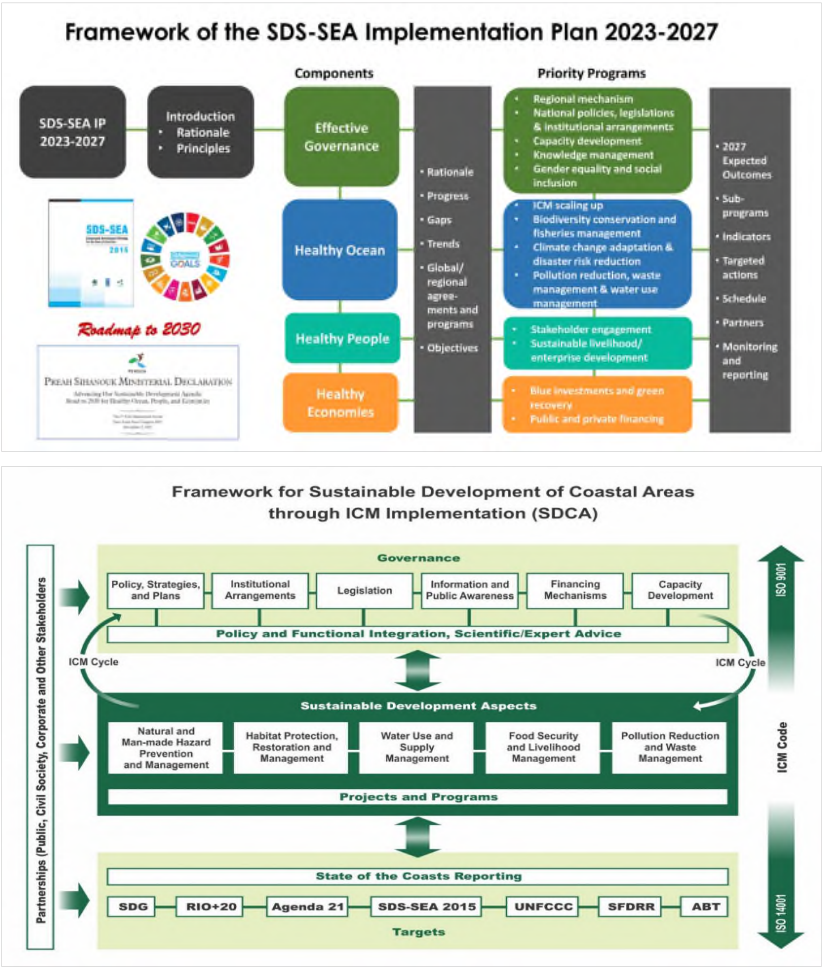
2023년 기준 PEMSEA에는 다양한 국가 및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필리핀 북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동티모르, 베트남)과 함께, 유엔개발 계획(UNDP), GEF 등 다양한 비정부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2022년 PEMSEA의 총 수령액은 약 2.5백만 달러로, 이중 90%는 다양한 해양환경 관련 사업들에 지원된다.

PEMSEA에는 해양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일례로 2003년부터 ‘진행되어온 동아시아 해양의 지속가능 개발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eas of East Asia, 이하 SDS-SEA)은 동아시아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국제협약, 기존 지역·국제적 행동 프로그램, 협정, 원칙 및 이행방안 등을 적용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2023년부터 5년간 새롭게 적용되는 중기 이행계획에는 효과적인 해양환경 거버넌스, 건강한 해양, 건강

24) PEMSEA 홈페이지, <https://pemsea.org/>(검색일 : 2023.10.2.)

한 사람, 건강한 경제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하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17〉 PEMSEA 해양환경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자료 : PEMSEA 홈페이지(검색일 : 2023.10.2.)

또한 동아시아의 연안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이하 ICM) 적용에 대한 '연안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of Coastal Areas, 이하 SDCA) 체제 개발은 지속 가능한 해양·해안 개발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거버넌스 시스템과 몇 가지 관리 시스템을 다룬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정책, 전략 및 실행 계획, 제도적 장치, 입법, 정보 및 대중 인식, 자금 조달 체계, 역량 개발 등에 대한 기능 강화를 이루고자 하고, 자연재해와 인재 방재 및 대응 관리, 자연 해안 서식지 보호, 복원 및 관리, 물 사용 및 공급 관리, 오염 및 폐기물 저감 관리, 식량 안보 및 생계 관리 등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가진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 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 DAC)는 1961년 설립된 OECD내 개발원조 위원회이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30개국 중 2009년에 한국은 24 번째 국가로 했으며, OECD DAC의 주요 목적은 개도국에 대한 ODA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의 교환, 개발의 조정, 국가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주요 목적하고 있다. OECD 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ODA 규모가 GNI의 0.2% 이상 또는 ODA 규모 1억 달러 이상 이어야 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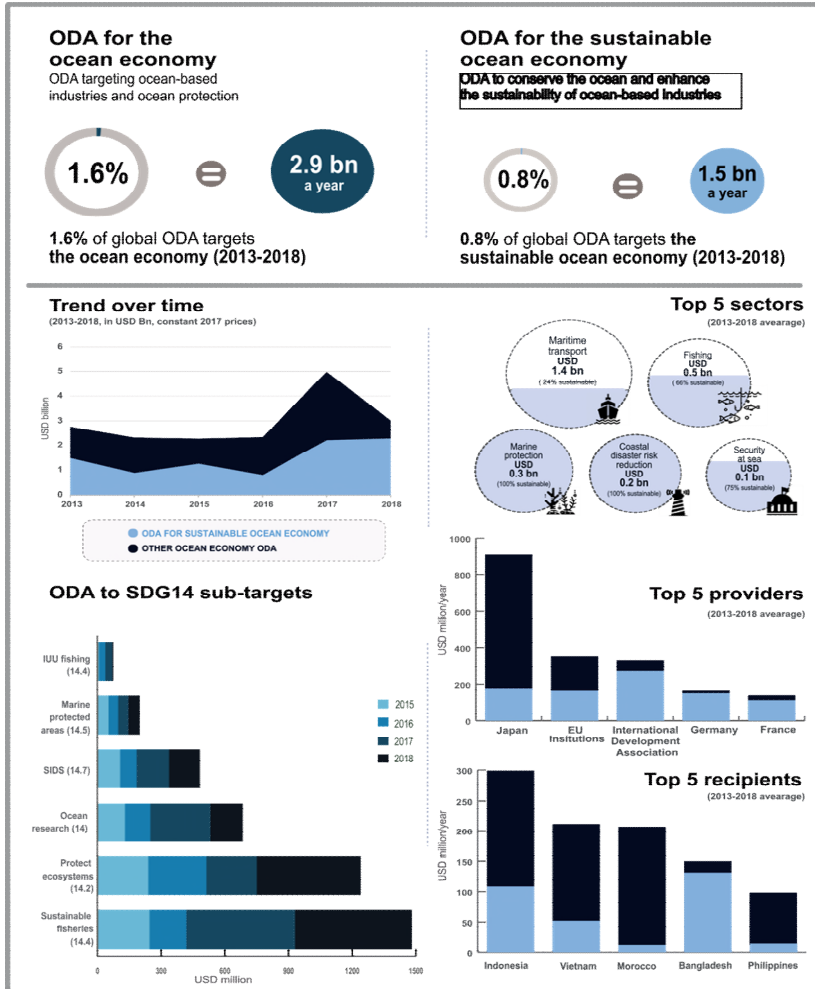
25)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dac/> (검색일 : 2023.10.2.)

OECD DAC에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Social Infrastructure & Services),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Economic Infrastructure & Services), 생산(Production Sectors), 다부문/Cross Cutting(Multi-Sectors), 원자재(Commodity Aid/General Programme Assistance), 부채 관련 지원(Action Relating to Debt), 인도주의적 원조(Humanitarian Aid) 등의 분야로 나누어 원조를 제공해주고 있다²⁶⁾. 2021년 기준 전체 원조의 약 41%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었고, 인도주의적 원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도 약 14~15%의 ODA 재원이 집중되었다.

OECD DAC에는 해양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기후 변화와 해양,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 해양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 해양 경제, 해양 경제 및 개발 도상국, 해양 오염, 해상 운송 및 조선 등 다양한 항목 아래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ODA 중 약 1.6%의 해양경제 분야에 들어간다. 일본, EU 등이 상위 공여국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상위 수혜국이다.

26) OECD 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5>(검색일 : 2023.10.2.)

〈그림 3-18〉 OECD 해양경제 관련 ODA 현황



자료 : OECD iLibrary(검색일 : 2023.10.2.)

04

해양환경 ODA 주요 공여국 특징 비교

제1절 중요도

해양환경 협력의 ‘중요도’ 측면에서 볼 때 EU와 일본 모두 국제협력에서 해양환경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각종 해양환경 관련 전략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고의 제3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EU는 「해양전략기본법」, 「플라스틱 전략」, 「청색경제전략」 계획에서 해양환경 협력은 EU ODA의 중요한 분야로 언급되어 있다.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분야 외에 환경적 연계성 강조 및 해양투기 대응을 위한 아시아 및 지중해 연안 지역 대상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등 글로벌 해양환경 문제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일본의 해양환경 ODA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고의 제3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해양환경 ODA를 개발의제에 포함하려는 일본의 노력과 JICA의 미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U의 해양환경 ODA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공여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U의 연평균 전체 ODA는 190억 달러였는데 이중 6억 6천 달러가 해양환경 ODA였다. 이 기간 중 OECD DAC 회원국 전체의 해양환경 ODA가 41억 6천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EU의 해양환경 ODA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해양환경 협력을 중시한다는 방침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해양환경 ODA의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의 해양환경 협력은 EU에 비해 그 중요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2절 목적

EU와 일본은 1990년대부터 해양 환경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환경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EU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에는 향후 매우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개도국과의 선박 재활용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지원, 맹그로브 복구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일본 정부가 2023년에 개정한 「일본의 개발협력 대강」에서 ODA의 추진 목표를 ‘국제 사회의 평화 및 발전에 기여하고 일본의 국익과 번영을 실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ODA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일본의 국익 확보에 대한 목표 의식이 숨겨져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였다.

반면 EU는 저소득국과 최빈국을 중점협력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CP) 국가들이 EU의 중점협력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10년간(2010~2020년) 해양환경 분야 ODA 수원국들 중 최빈국 및 저소득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하였다.

제3절 대상

일본과 EU는 해양환경 협력의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그리고 지리적 위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협력대상국가 지역을 보면 일본은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양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EU는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EU는 과거 식민지를 경험으로 아프리카, 태평양, 카리브해 국가들과는 설립 이전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의 제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 해양환경 ODA의 상위 10개 수원국 중에 모로코를 제외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가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모두 아시아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시장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며 경제성장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EU 해양환경 ODA상위 10개 수원국을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레바논, 오세아니아 국가, 카리브해 국가, 가이아나, 북아프리카, 케냐, 알제리아, 소말라가 있는데 이는 일본의 대상국가와 매우 다르다.

제4절 주체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자국의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을 연계하는 전략을 취해왔으며, 이후 1990~2000년대에 인간안보 개념의 도입과 함께 인도주의적 목적을 내세운바 있으나,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 접어들어 따라 2010년부터 이전의 경제적 국익을 고려한 원조정책으로 회귀하였

다(문경연 외, 2019).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ODA 자금을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연계하는 전략과 추진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연계하는 전략 문서를 지속적으로 수립하였다(문경연, 2019). 예시로써 2023년에 개정한 「일본의 개발협력대강」에서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 외에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JICA의 지원 하에 민간기업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제도 체제 정비에 노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OD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일본의 국익이 국제사회의 목표와 다르지 않으며, 일본 기업이 협력적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이며 다른 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최근 이른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수자원, 에너지 효율향상 등의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의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고의 제3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JBIC의 금융기능을 활용하여 해양환경 협력에 전방위적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U도 민간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회원국 및 지역 간 조율과 민관협력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단일시장의 영향, 규모 및 통합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최근 강조하고 있다.²⁷⁾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했으며 네 가지 수단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자금조달 원활화를 살펴보면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 차원, EU는 민간차원에서 재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국부펀드를 신설한다고 하였다.

27) 브뤼셀연구소(검색일 : 2023.07.12.)

0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주요 공여국으로 EU와 일본을 선정했다. 일본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 ODA를 공여하는 국가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해양환경 분야에는 작은 비중을 나타냈지만 최근 아프리카에 해양환경 ODA 공여를 선어하는 등 양적인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로 EU는 양적으로 많은 ODA를 공여하는 국가이며 오랜 ODA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원조 모범국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도국의 국제협력 전 분야에서 환경 주류화를 중요시 여기고 수원국의 수요에 기반을 둔 해양환경 ODA를 공여하는 등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따라서 두 국가를 비교해봄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해양환경 ODA의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U와 일본의 해양환경 ODA는 아래 <표 5-1>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표 5-1〉 일본과 EU의 해양환경 ODA 공여 특징 비교

구분	일본	EU	비교 기준
중요도	• 3억 1천만 달러	• 6억 6천만 달러	• 해양환경 ODA 규모
주요 목적	• 경제적 이익	• 인도주의적 지원	• 정책 및 전략 보고서
주요 대상	• 아시아(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	• 최빈개도국(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레바논 등)	• 협력 대상 국가
주요 주체	• 양다자, NGO, 민간기업	• 양다자, 민간기업, NGO 등	• 기구표 참고

자료 :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와 일본의 해양환경 협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양환경 협력의 ‘중요도’ 측면에서 볼 때 EU와 일본 모두 국제협력에서 해양환경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EU가 해양환경 ODA규모로만 본다면 그 중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EU는 해양환경 협력의 대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증시하고 있다. 이런 면은 일본의 해양환경 ODA가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거 배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EU는 일본과 달리 아프리카, 카리브 해 지역 등 최빈국과 저소득국을 중점 협력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체 또한 양국가 모두 민간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EU의 해양환경 협력의 큰 특징은 환경 주류화 정책이다. EU는

에 EU는 2절 3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다양한 환경주류화 지침을 통해 개도국 개발원조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도 환경 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국은 2010~2020년 동안 전체 ODA 공여액 220억 달러(27조

700억 원) 가운데 약 9백만 달러(121억 8천만 원)를 해양환경 분야에 공여했다. 이는 일본과 EU와 비교하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도 최근 들어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양적으로 ODA를 확대하려 하지만, 비중은 미미하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공여국이 정책 개발단계에서부터 해양환경을 고려하는 환경 주류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황에 우리나라 해양환경 ODA규모는 국제사회의 권고 기준 및 경제력이 유사한 여타 공여국의 제공 수준에 비해 크게 미흡하며 협력 대상 국가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환경 협력이 시행된 것은 2008년 전후로 역사가 일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협력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양적인 부분과 역량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과 EU는 우리나라에 비해 해양환경 협력의 역사가 꽤 길고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 왔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험을 보고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얻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절에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의 주요 내용을 참고로 정책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정책제언

1.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기 위한 해양환경 국내역량 강화

우리나라 해양환경 협력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해양환경 협력을 위한 국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장의 제2절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는 전 세계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OECD DAC 평균 이상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해양환경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으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등의 단순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염물질분해·거동, 생물영양 규명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역량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²⁸⁾ 다시 말하면 단순기술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분야에서 개도국 간의 해양환경 협력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EU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제도적 및 기술적 역량을 축적해 왔다. 예컨대 일본은 높은 해양환경 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적응, 방재, 수자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EU는 전체적으로도 환경 등 해양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²⁹⁾ 따라서 EU와 일본은 개도국과의 효과적인 해양환경 협력이 가능했을 것을 판단된다.

2. 개도국 해양환경 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지난 2008년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하기 전 특별검토 및 2012~2017년 동료검토(OECD DC Peer Review)에서 환경주류화 강화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DAC의 환경주류화 강화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환경주류화 길라잡이(2013)’를 발행했고 ‘KOICA 환경주류화 이행전략(2013-2015년)’을 수립했으며 ‘환경주류화 이행 지침(2013

28) 한국공학한림원(2014), p. 33

29) KDI 경제정보센터의 ‘기후변화 대응은 새로운 기회라는 유럽인들의 인식’ 발행문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의원 705명 중 녹색당 의원은 72명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7개 정당 중 소속 의원이 네 번째로 많다. 유럽 각국에서 여타 진보정당과 구분되는 녹색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현재 인식과 100년 이상의 고민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년)’을 내규로 제정했다. 하지만 OECD DAC 동료평가(OECD DAC Peer Review: Korea)에 따르면 “한국은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 주류화를 위한 긍정적인 단계를 밟고 있으나 국가협력전략(CPS)상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으며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분석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ODA를 포함한 협력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중요한 목표이다. EU는 해양환경을 하나의 특정 분야가 아닌, 사회 개발, 빈곤 감축 등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프로젝트 단위의 원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해양환경 요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개발원조정책 수립 시 해양환경 주류화 강화를 위한 정부의 통합적인 주류화 개념을 기반으로 환경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3. 해양환경 분야 협력 파트너십 및 자원 다각화

오랫동안 해양환경 협력을 해온 일본, EU 등 주요 공여국에 비해 한국은 개도국과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와 수원국 네트워크가 부족해 보인다(방호경 외, 2018). 해양환경 협력에 특화된 다자기구와 선진 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제기구와의 공동 워크숍 및 초청연수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그린뉴딜 ODA에 대한 수원국 관계자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원국의 그린뉴딜 수요를 구체화하는 등 해양환경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해양환경 분야관련 한국R&D의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한데, 앞서 제시한 해양환경 관련 R&D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R&D 투자 규모를 늘리는 한편 재원 다각화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s) 등에서 운용중인 자금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해양환경 협력에 특화된 국제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양환경 분야의 특성을 매칭하여 그린뉴딜 ODA 추진에 관련 국제 해양환경 기후기금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수원국 맞춤형 그린뉴딜 ODA 수립 필요

기존 ODA는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을 최종적인 성과로 강조하였으나 그린뉴딜 ODA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등 다른 측면의 성과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환경 분야 ODA 콘텐츠를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의 측면에서 재정리하고 현재 진행되는 한국판 그린뉴딜 요소를 접목하여 신(新)협력모델로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한국의 ODA 정책 경험과 그린뉴딜의 요소를 접목한 해양환경 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타 공여국의 ODA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해양환경 ODA 사업 지속 확대 30)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 강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위해 '23년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를 287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예방·처리 문제가 국제적인 해양오염 현안으로 논의됨에 따라, 올해부터 PEMSEA와 협력하여 2028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세계 최대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인 동티모르,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별 상황에 있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차단시설, 수거 차량, 집하장 등 관련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은 해양수산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제적인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상기와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해양, 특히 해양환경 분야에 특화된 한국만의 해양환경 ODA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과 같이 해양오염 대응 기술 이전, 해양 생태계의 지속성과 환경오염 감소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자원화를 통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사업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ODA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도국과 함께 확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검색일 : 2023.07.12.)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 외교부, 2017.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1.
- 관계부처 합동,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
- 김정현,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동향”, 「월간 해양수산」, 2008.
- 김수진·조정희,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 (ODA) 추진현황 및 시사점”, 「월간 해양수산」, 2008.
- 곽성일·전혜린,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대한민국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대통령실, 2022.
- 문경연·박현아, “일본 ODA의 민관협업 체계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9.
- 방호경·김대홍,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8.
- 안예현,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1.
- 이구성, 「일본의 환경 ODA 추진 동향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
- 이주관·김종덕·문진영·엄준현·김지현·서정민,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장연우·문민지·박수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경기도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방안 탐색」, 경기도교육연구원, 2023.
- 장용창·김경신·이진환·이윤정, “국제개발협력 사업, ‘스리랑카 해양쓰레기 관리능력 개발’의 결과와 시사점”, 「해양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 정성춘·김규판·이형근·김군태·오태현 「일본과 EU의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최지원, “여수프로젝트 성과로 본 해양수산 ODA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제2013권 제4호, pp.222-238, 2013.
- 홍현표·마창모, 「수산 분야 ODA 사업의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한기원·박희망·강창우·최수빈,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국외 문헌

- EU, *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 2018.1
-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 Development Cooperation*, 2009.
- ECDPM, *The European Union's Development Policy*, 2008.
-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Greenhouse gas emission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09.
- JBIC, *2022 Annual Report*, 2022. 7.
- Kitt Florian, *EU Aid Architecture: Recent Trends and Policy Directions*, World Bank, 2010.
- OECD, *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No.8" Global and Region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t, 1995.

Steve Fletcher, "Policy options to eliminate additional marine plastic litter by 2050 under the G20 Osaka Blue Ocean Vision", 「UN environment Programme 패 널」 University of Portsmouth, 2023

인터넷 자료

EC,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policies/european-development-policy/european-consensus-development_en(검색일 : 2023.07.17.)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8L0056>(검색일 : 2023.07.12.)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893c5ae2-a63a-11eb-9585-01aa75ed71a1>(검색일 : 2023.07.1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3DC0102>(검색일 : 2023.07.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2021:240:FIN>(검색일 : 2023.07.12.)

https://environment.ec.europa.eu/strategy/plastics-strategy_en#connected-strategies(검색일 : 2023.07.12.)

OECD iLibrary, <https://oecd-main.shinyapps.io/ocean/>(검색일: 2023.7.10.)

OECD Data Platfor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d6a100a8-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d6a100a8-en>(검색일: 2023.7.10.)

UN, <https://unric.org/en/blue-economy-oceans-as-the-next-great-economic-frontier/>(검색일 : 2023.07.12.)

UN Global Compact, <https://blueprint.unglobalcompact.org/sdgs/sdg14/>(검색일: 2023.7.10.)

UNEP, <https://www.unep.org/explore-topics/ocean-coasts>(검색일 : 2023.10.2.)

PEMSEA, <https://pemsea.org/>(검색일 : 2023.10.2.)

Foreign Press Center Japan, <https://fpcj.jp/en/prlisting/20230206-ide-jetro-intl-symposium/>(검색일: 2023.7.15.)

브뤼젤연구소, <https://www.bruegel.org/book/green-industrial-policy-europe>
(검색일 : 2023.07.12.)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policy/maritime/index.html>
000243.html(검색일: 2023. 7. 17.)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yo/20_hakusho/honbun/b2/s3_6.html(검색일: 2023. 7. 19.)

https://www.mofa.go.jp/ic/ge/page25e_000317.html(검색일: 2023. 7. 19.)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eisaku/taikou_202306.html
(검색일: 2023. 7. 19.)

일본 보도자료, <https://fpcj.jp/en/prlisting/20230206-ide-jetro-intl-symposium>
(검색일: 2023.7.29.)

통계청,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14/>(검색일자: 2023.7.13.)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8921&menuSeq=971&bbsSeq=10>(검색일자: 2023.10.31.)

일반사업 2023-29-02

그린뉴딜 정책을 위한 주요국 해양환경 ODA 사례 조사

인쇄 2023년 12월 29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비매품

